

연합사이며 '용병화'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 와 민간인 근무자들이 소비하는 재정액수가 엄청난 규모에 달해 대규모 상권이 형성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단순상권 형성이 아니라 이들의 퇴폐적 향락적 소비성향에 맞추기 위해 '성의 유희'를 중심으로 한 섹스 문화가 판치기 마련이다. 용산미8군기지 주변에 형성된 이태원과 동두천, 오산 등이 대표적 지역이며 디스코 클럽, 살롱, 사창가가 이른바 '주한미군문화'의 문화시설인 것이다. 이곳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모두 다 한국인이어서 성의 식민지화라는 문제도 심각하지만 전국에 배치되어 있는 이같은 문화권이 끼치는 문화적 해악성은 대단히 심각해, 이미 한국 청소년문화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다. 가치관이 불완전하게 형성된 청소년들에게 있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섹스 문화가 파고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전통문화를 파괴하면서 파고들어오는 향락적인 성문화의 진원지가 주한미군기지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은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신식민주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것은 다름아닌 문화적 식민주의이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이 끼치는 문화적 해독 중에 가장 심각하게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다름아닌 AIDS(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다. 감염의 유무, 경로, 치료방법을 알 수 없는 금세기 최대의 살인병기로 불리는 AIDS는 진원지역 및 대량확산지역이 미국이며, 따라서 미국인이 AIDS를 국내에 확산시킬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러나 한미간의 불평등한 행정협정으로 말미암아 이들에 대한 병역검사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88년 올림픽 이후 AIDS에 감염된 한국인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사망자까지 발생한 점을 볼 때 미군에 의한 AIDS의 확산은 심각한 문제이다.

감염의 정도가 높은 주한미군에 대한 검사 및 통제가 불가능하고, 기지주변의 한국인 여성들과의 성관계가 방치되고 있는 한 AIDS의 확산 속도는 계속 빨라질 것이며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의 하나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이 문제는 문화의 퇴폐성이 극에 달하고 있는 사회적 상황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검사 혹은, 수치 점검 등 피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한미군이 가져오는 본질적인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4. 미국의 동북아전략과 주한미군의 앞날

80년대 중반 이후의 미국의 세계질서는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사회주의권의 개혁정책으로부터 시작된 평화기조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냉전의 시대는 서서히 종언을 고하고 본격적인 '새로운 평화체제' (=신데탕트)로 돌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극동아시아에서는 이같은 평화기조와는 무관하게 여전히 냉전기운이 감돌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한 군사훈련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시아에 대한 군사지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1)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의 완성

극동아시아 방어라는 명분을 내세운 미국은 이 지역에서 대소방위를 위

한 전진기지로 설정한 한국, 그리고 태평양 지휘사령부의 역할을 맡고 있는, 일본과 지속적인 군사동맹관계를 맺어오고 있었다. 미국은 7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이 지역에서의 군사적 역할을 분담시키기 위해 한·미·일 3각 군사동맹체제를 준비하기 시작했으며, 80년대 후반을 지나면서 이는 거의 완성단계에 돌입했다.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의 완성은 외형상으로 는 세나라 사이의 결합의 정도가 높아진 것이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지배형태가 보다 체계화하고 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미국은 한국과 1953년에 체결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군사동맹체제를 유지해 왔다. 그리고 76년부터는 한미 양군이 참여하는 팀 스피리트훈련을 실시하면서 한미간 군사동맹체제는 완결상태에 들어갔다.

또 미국은 2차대전 이후 일본과도 군사적 동맹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반도에서 6·25전쟁이 거의 끝나가던 무렵인 1952년 4월에 미국은 일본과 단독강화조약을 체결하고 일본을 점령상태에서 해제시킬 것을 조건으로 「미일 안보조약」을 체결했다. 대다수 일본국민들의 적극적인 반대에 불구하고 미일 안보조약은 1960년 6월에 개정이 강화되어 현행 안보조약에 이르고 있다. 이때의 안보조약 개정에 의해 미일 공동작전체제가 설정되고 자위대 증강의무가 약속된 것이다.

미일 안보조약이 체결된 직후인 52년 8월에 일본은 경찰예비대를 보안대로 개편·강화시킴과 동시에 해상자위대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2년 뒤인 1954년 7월에는 현재의 방위청이 신설되었으며, 동시에 육·해·공 3군체제의 일본자위대가 발족되었다. 그 뒤 일본 자위대는 '아시아 최강'을 자랑하며 전세계적으로 막강한 화력을 보유한 그룹에 포함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미일 군사동맹관계에서 나타난 결과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였다. 그리고 미일관계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했던 것은 사실상의 안보개정이라고 불리는 「미일방위협력을 위한 지침(가이드 라인)」의 채택이었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패한 이후 일본을 자신들의 세계전략,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진기지로 이용하기 위해 이 지침을 마련했다. 1976년 8월 미·일 양국은 미일안보협의위원회의 하부기구로 미일방위협력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2년여의 연구작업을 통해 78년 11월에 이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지침의 핵심은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을 가장 중요한 군사동맹국으로 세우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일본헌법을 무시한 미일 공동작전체제를 구체화하고 미일 공수동맹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미·일의 군사동맹은 이때 완성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뒤에도 일본자위대의 군사력은 계속 증강되어 왔으며 80년대 중반에 '방위비 지출을 GNP의 1% 미만으로 한다'는 헌법 조항은 사실상 무효화 되었다. 현재 일본은 계속적으로 무한 군비증강을 하고 있으며, 그 화력은 전세계에서 몇몇 안가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밖의 몇 나라들이 함께 벌이는 림팩(환태평양)훈련은 한미간의 팀 스피리트훈련만큼이나 실전을 방불케하는 중요한 연결고리이다. 참가국의 해군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훈련은 태평양과 미국 본토 서해안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데,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80년도에 처음 참가했고 86년 훈련에 참가한 일본군사력은 80년도에 비해 4배로 늘었다. 이같은 사실은 이 훈련

에서 일본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 훈련이 미·일 군사동맹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한국, 일본과 각기 군사동맹관계를 맺어온 미국이 이 지역의 군사지배체제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3각 군사동맹체제는 세계의 축을 기본으로 설정해 왔으며, ① 한·일군사연습의 실시 ② 한국과 일본의 군사분담비의 증액 ③ 대규모 군사훈련의 실시 및 강화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해서 동맹체제가 완성되어 갈 때 자신들은 책임·결정권만을 보유한 채 순군사적인 측면의 역할은 동맹국에게 대부분 떠맡긴다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다.

90년대에 들어서 이 동맹관계는 완성되었으며 미국의 전략은 이에 기초해서 계획되고 있다. 이러한 전략체제의 변화는 주한미군을 중심축으로 해서 특히 한국에 대한 군사지배체제의 강화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① '한·일합동군사훈련'의 실시

한국, 일본과 개별적으로 군사동맹관계를 맺고 있던 미국이 3각 군사동맹을 추진시키기 위해 1차적으로 필요했던 것은 한·일 양국간의 군사적 관계를 맺게 하는 일이었다. 이것이 기초되지 않을 때는 아무리 미국이 매개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3각 동맹체제의 결성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1965년의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한일간에는 군사적 관계가 맺어질 잠재적 가능성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군사적 침략이라는 악몽을 떠올리는 한국민의 반일감정 때문에 한국의 독재정권과 일본의 극우보수정권은 대단히 조심스럽게 군사적 관계를 맺어왔다.

한·일합동군사훈련에 도달하는 과정은 ① 군사 및 군인교류 ② 훈련진행시 참관단 파견 혹은 소규모 훈련참여 ③ 본격적인 합동군사훈련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미 80년대를 경과하면서 처음 두단계를 먼저 거쳤고, 89년 파섹스훈련(태평양 훈련)에 주한미군과 한국군 그리고 일본자위대가 함께 참석했으며, 90년의 림팩훈련(환태평양 훈련)에도 한국과 일본이 합동으로 참가하는 경로까지 이르러 본격적인 합동군사훈련으로 돌입하고 있다.

한·일간 군사교류는 한·일 양국과 동시에 군사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미국의 주도로 진행되었다. 1962년 2월에 열린 미·일 안전보장협의회에서 최초로 '한일 군사협조계획'의 추진문제가 논의되었으며 ① 일본자위대 간부의 서울 상주 ② 한국군과 자위대의 교환시찰을 장기화시킬 구상이 확정되었다. 이 구상은 65년 한일조약 체결에 의해서 구체화 되었으며, 같은 해 일본군인 그룹 30명의 한국방문을 시작으로 66년 한국 무관의 동경 상주, 69년 9월에 일본자위대의 서울 상주가 이루어졌다. 69년에는 일본자위대와 한국군의 군사정보부간에 한일 정기정보연락회의가 개시되었으며, 70년 12월에 한국 국방부는 "한국군 장교와 일본 방위청의 고급장교를 1년간 교환근무시키는 협정"을 맺었음을 확인했다. (『문화방송』 71년 1월 2일 보도)

이같은 흐름 속에서 쌍방간의 군인교류는 활발히 진행되어 75년부터 80년 말까지 한국측으로부터 323명, 일본측으로부터 79명이 상호방문했다. 또 80년대에 들어서는 80년 한국측의 차규현 육사교장이 일본의 방위대학교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84년초까지 육사와 방위대생의 교류는 14회에 이르렀다. 또 81년 9월에는 최초로 육사생도가 일본 방위대학교에, 그리고 83년 11월

에는 방위대생이 육사에 각각 유학했다. 동시에 국방대학원생의 방문·유학도 계속 추진되어 80년 4월(16명), 81년 10월(25명), 82년 9월(21명), 83년 10월(17명) 등 83년 현재까지 모두 4회에 걸쳐 79명이 일본을 방문하여 연수교육을 받는 등 70년대 이후 군인·군사교류는 계속 추진되어왔다.

군인·군사교류가 계속 이어지는 것에 기초하여, 80년대에 들어서는 군사훈련시 참관단을 파견하거나 훈련에 소규모적으로 참여하는 합동군사훈련의 실현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983년 9월 오키나와의 미 공군 카네라기지에서 제5공군이 주최한 세이버 스피리트Ⅱ 훈련 - 항공기에 미사일·탄약 등을 장착하는 훈련 - 이 실시되었으며, 여기에 주한 제8 전술전투항공단(군산)과 오키나와주둔 제18전술전투항공단 소속의 8개 팀이 참석하였다. 주목할만한 것은 이 훈련에 주한 미 공군 제6497 통합항공기정비대(대구) 등의 팀 요원으로 한국군 9명이 참가했으며, 일본자위대의 남서항공단 혼성단에서 12명이 견학명목으로 참가한 점이다.

견학·참관 등의 형태와 함께 합동 군사동맹관계로 접어드는 조짐은 '연계훈련'에서 나타났다. 한국에서 가장 대규모 훈련인 팀 스피리트훈련이 실시될 때 일본도 동시에 이와의 연계를 가정한 훈련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76년부터 실시된 이 훈련을 전후로 하여 일본주변 해·공역내에서 미·일 합동 대잠수함 연습, 공군기 전투훈련 등이 행해져 왔다.

한·일간 합동군사훈련 및 군사적 동맹관계의 형성을 위해 실시·준비되어 온 이같은 과정은 89년 파섹스훈련과 90년도 림팩훈련에 한국군과 일본자위대가 실제로 참여함으로써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② 한국과 일본의 군사분담비 증액

해외에 주둔해 있는 미군은 기지사용료 등의 비용을 자체적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방위역할을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해당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방위비를 분담 지원받는다. 특히 한국에서는 기지사용료를 일체 지출하지 않음은 물론 한국과 일본 방위비 분담액은 그 어느 지역보다 높으며, 미국의 전략과 맞물려 계속 증강추세에 놓여 있다. 아시아 군사지배체제의 강화를 노리는 한·미·일 3각군사동맹의 완성을 위해서는 단순히 군사작전만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되고, 이를 지탱하는 물적 토대인 방위비 분담을 증강시켜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방위비 지출은 GNP의 1% 미만으로 한다는 헌법상의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미 방위력을 증강하고 있다. 즉 일본은 군사대국화의 길을 걸으며 아시아에 대한 제2의 지배를 꿈꾸고 있어 미국의 분담증액요청은 압력이 아니라 바라던 바가 되었다.

한국의 경우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규모는 88년 현재 22억 2천만 달러(직접지원비 2억 7천만 달러)였다. 매년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는 증강 압력 및 협약을 맺는 주요 경로로, 89년 7월에 열린 21차 연례안보협의회에서는 이같은 압력이 더욱 높아졌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직접지원비에 해당하며 매년 4천만 달러를 부담하던 연합방위증강사업(CDI P)에 - 88년에 합의된 액수 - 91년까지 연3천만 달러씩을, 그리고 92년부터는 연 5천만 달러를 추가 지급하겠다고 증액 압력을 21차 회의에서 수용하게 된 것이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직접지원비를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하도록 요구해 왔으며 CDIP 분담액 증액으로 직접 지원비가 상당부분 늘게 되었다.

이처럼 해마다 증강되고 있는 방위비분담 압력은 한·미·일 3각동맹체 제완성의 물리적 토대가 됨과 동시에, 이의 완성시기와 맞물려 주한미군 감축문제가 논의되면서 무한정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③ 대규모 군사훈련의 실시 및 강화

88년까지 미국이 극동아시아와 태평양지역에서 한국, 일본과 함께 실시한 군사훈련은 한반도에서 팀 스피리트훈련 및 이와 함께 진행한 미·일 연계훈련, 그리고 태평양해상에서의 립팩훈련 등이 구축되었다. 그러나 이 지역에 대한 군사지배체제의 강화, 그리고 이를 시행할 한·미·일 3각동맹체제의 완성을 위해서 3국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이 89년부터 실시되기 시작했다.

우선 한국군이 90년도부터 립팩훈련에 참가기로 설정했다. 이 훈련은 미국이 71년부터 태평양의 해상교통로 방어를 주목적으로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해군과 함께 실시하고 있는 해군 기동훈련이다. 훈련해역은 미국 캘리포니아 남쪽과 하와이 등이 중심으로 지금까지는 제한된 전략해역을 대상으로 했다. 일본은 88년에 호위함 8척, 잠수함 1척과 대잠수함 초계기 8대가 이 훈련에 참여했다. 한국군이 90년부터 참가함에 따라 이 훈련은 극동아시아 방위 전진기지 역할국인 한국·일본을 중심으로 새로운 전략적 가치를 부여받게 된 것이며, 여타의 대규모 훈련과 연계되면서 실제적인 전략해역은 더욱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

극동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군사훈련의 강화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89년에 처음 실시된 파섹스훈련이다. 파섹스훈련은 한·미·일 군사동맹체제의 완성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이 지역에 대한 지배력의 수준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은 이 훈련에 대해서 "미태평양군은 태평양 전역에서의 지휘·통제 및 상호운영성과 후방지원에 관한 훈련을 89년 9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다"고만 발표했을 뿐 구체적인 규모나 참가국들을 밝히지 않은 등 성격과 목적은 비밀에 붙였다. 그러나 각종 자료와 군사정보에 따르면 파섹스 89는 '범태평양적인 공격훈련'으로 파악된다.

우선 이 훈련에는 미태평양군과 함께 캐나다, 호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태평양 연안국가 중 뉴질랜드만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가 참여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일본과 한국이 가장 주도적으로 이 훈련에 참여한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참여는 89년 9월 19일 국회국방부감사에서 이상훈국방부장관이 이를 인정함으로써 공식적으로 밝혀졌다.

순수한 군사적인 측면에서 파섹스 89를 보면 우선 미태평양군은 동태평양을 맡고 있는 제3함대와 서태평양·인도양을 관할하는 제7함대에서 4개 항모기동부대와 항공기 5백대, 해병1개사단, 육군2개 사단 등이 참가한다. 참가병력은 4만 5천여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4군통합연습을 실시한다. 여기에는 미본토와 하와이, 일본, 한국, 필리핀과 마리아나 군도 동 태평양전역에 주둔중인 미군병력이 총동원된다. 훈련지역 또한 미서해안 - 하와이 - 알류산 열도 - 일본 - 필리핀 - 남지나해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 걸쳐 있다.

미국이 이같은 대규모 기동훈련을 실시하는 목적은 본질적으로는 이 지역에 대한 군사지배체제의 강화이지만 구체적으로 미국의 대소전략의 핵심

을 이루고 있는 이른바 '해양전략'을 연습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해양전략의 기본개념은 "국지분쟁이 소련과의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을 때 해군을 주력으로 신속히 미군전력을 전방으로 전개 유럽·아시아대륙 내 소련의 전략적 요충을 동서에서 협공한다"는 동시다발보복전략에 기초하고 있다.

지난 86년 와트킨스 미해군작전본부장이 공개한 이 전략의 태평양에서의 적용구상은 3단계로 이루어졌다. 즉, 대소전쟁이 발생할 경우 1단계로 전방 배치된 해상전력은 즉시 전투태세에 돌입하여 소련의 전략탄도 미사일 잠수함을 공격가능권에 몰아넣고 해상교통로를 봉쇄한다. 2단계로 미·소개전 시 해군을 소련지역 깊숙히 전진시켜 소련의 모든 전략탄도 미사일 잠수함에 공격을 가한 후, 3단계로 해병대를 쿠릴 열도와 사할린 등 소련 영토에 상륙시켜 전쟁을 종결시킨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파섹스89의 훈련 내용도 △캄차카 반도의 무력화 △알류산 열도와 쿠릴 열도의 점령 △오호츠크해와 동해의 제압 △일본과 한국의 방어 및 반격 △해상교통로의 확보 △연해주에 대한 공격 등으로 구성되었다. 해군 특히 극동쪽의 해군이 취약한 소련에 대해 미국은 기동성이 뛰어난 항공모함 기동부대의 장점을 극대화 시킨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같은 군사적인 면 이외에 보다 중요하게 정치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이 전략을 수행하는 것이다. 미국이 세계지배권을 확보·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지금까지 유지해 오던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미국은 이 지역에서 의 한·미·일 3각군사동맹체제를 완성시키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으로서도 이 체제는 지배권을 유지한다는 목적과 함께 일본을 대리체제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파섹스 89에서 일본의 역할은 증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미국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미일 군사훈련관계는 립팩훈련에서 나타나듯이 해상자위대만 참여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파섹스 89에서는 육상자위대의 최정예부대인 7사단과 5사단, 그리고 항공자위대의 최전방 전투부대인 항공총대가 참여하는 등 자위대 전체가 참여한다. 그리고 일본자위대는 방어적 훈련 뿐만 아니라 소련의 연해주, 사할린에 대한 공중폭격훈련 등 공격적 훈련까지도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이 지역에서 대리 지배체제를 수립받기 위해 일본은 군사력 증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89년에 공개된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들의 방위비 지출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일본은 89년과 90년의 방위예산 증가율이 4%를 초과, 세계 제3위의 방위비 지출국이 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일본의 90년도 방위비는 전년도 보다 6.35% 증가한 4조1천 6백 90억엔으로 최근 4년간 가장 높은 신장율을 보였다. 방위력 증강과 더불어 일본의 방위개념도 바뀌고 있다. 89년 9월 28일 마쓰모토 당시 일본 방위청장관은 자위대의 기본전략을 종전의 '전수방위'에서 '전진방위'로 전환한다는 계획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인접국에서의 전쟁상태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일본의 방위력 증강, 그리고 한·미·일 3각 군사동맹체제의 구성을 매개로 추진되는 파섹스훈련의 실시에 대한 세계의 여론은 △소련이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평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소련을 '가상적'으로 '공격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한다는 점 △태평양연안국 들을 자국 방어적인 개념에서가 아닌 대소공격전략 차원으로 끌어들이므로써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나토화를 기도함과 동시에 군사적 긴장 상태를 고조시켜 평화정책을 결정적으로 해치고 있다는 점 △집단지위권의 행사를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본의 자위대를 다국간 '공격훈련'에 참여시키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강한 비판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 지역의 지배권 유지를 위한 이 훈련에 대해 요지부동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커다란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과 일본을 전략적 거점으로 한 한·미·일 3각 군사동맹체제의 완성과 군사지배체제의 강화를 위해 주한미군은 그 주둔병력 수와 관계없이 중요성이 점차 격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다시 말하면 미국의 군사지배체제의 강화를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은 더 없이 중요한 것이고 철수의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 진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2) 한국군의 통합군체제로의 재편

한반도 주변 여건을 통해 군사지배체제를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미국은 한국내 군사체제의 대폭적인 변화를 통해서 한국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 지배력을 더욱 높이려 하고 있다.

89년 10월 24일에 발표된 이른바 통합군 사령부의 설치계획(818계획)의 최종안은 육·해·공 각군 본부를 완전 해체하고 수개의 작전사령부 및 기동군사령부를 국방장관 예하의 국방참모총장, 혹은 국군총사령관이 일괄 지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같은 '군조직개편' 계획은 군부에 대한 획일적 통제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독재정권의 의도도 담고는 있으나, 보다 중요하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지배체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미국의 지배전략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소전진 군사동맹을 장기적으로는 '지역동맹군사령부'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소속단위 사령부를 이들 군 지휘체제를 '통합군'으로 구성할 것을 이 지역 나라들에 요구해 왔다. 특히 한국의 경우와 관련해서,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지는 한 기고 논문을 통해 "현재 한국군의 작전부분을 통합 지휘하고 있는 연합사령부를 2개로 분리해 그 중 하나의 작전지휘권을 한국군장성(통합사령부)에게 이양함으로써 한국군의 아·태지역 사령부로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매끄럽게 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며 현재 미 정부에서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는 한국정부가 발표한 '통합사령부'설치 계획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의 군사전략과도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반증해 주고 있다.

이른바 '아시아의 나토(NATO)'라 일컬어지는 '지역동맹군사령부'가 건설될 경우 한국군이 이 단위의 주체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전군을 일괄 지휘하는 '통합군 사령부'가 건설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주한미군의 작전지휘권중 일부를 이양받아도 미군을 정점으로 한 군령의 중심 지휘체제는 지역동맹군 사령부가 생김과 동시에 그대로 살아 남아 미국의 대소·대북 군사작전지휘권에는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더욱이 주한미군의 작전지휘권 문제로 논란과 비판의 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한국내 현실을

감안하면 이같은 이원화 방안(연합사 분리)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미군이 계속 작전지휘를 담당할 제2사령부는 주로 핵기지 및 공군편제로 구성된 것이 분명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한국군에 대한 실제적 통제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 분명하다.

이처럼 한국군의 통합사령부 설치 추진은 현 집권체제의 장기적 안정화라는 국내적 목적 이외에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전략과도 밀접한 연관을 지니며, 이 지역에 대한 미국 지배구조의 공고화과정이라는 목적을 갖는 것이다.

5. 주한미군과 자주국방

주한미군의 주둔이 절실하다고 주장하는 미국과 한국 정부당국이 내세우는 논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보다 우세하며 따라서 남침의 위협이 항시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한측의 군사적 열세를 보충함으로써 전쟁 발발의 위험성을 억제시키는 전쟁역지력 발휘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 정부당국과 미국측에서 공개하는 남·북한 군사력 비교자료는 항상 북한이 월등하게 우세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주변의 역학관계에 직접적인 이해가 달려 있지 않은 제3국의 보고서 및 객관적 자료들은 이미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남북한의 군사력이 거의 대등한 관계로 들어서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현대에 들어서는 군사력을 비교하는 데 있어 장비의 산술적 수치상의 우열보다는 장비의 현대화 여부를 더욱 중요한 요건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전력의 객관적 비교는 쉽지않은 문제이다. 미국방정부센터에서 비교한 89년의 군사력을 <표 2> 참조) 보면 북한이 정규군과 연안경비정·어뢰정·잠수함에 있어서만 숫적 우세를 보일 뿐 나머지는 남한의 군사력이 훨씬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 정보센터의 소장인 진 라로크 전 미해군제독은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89년 10월 27일)에서 장비의 현대화가 군사력 비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전제하면서 "북한의 군사장비는 한국군 장비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낡은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경제, 군사, 기술 등 모든 측면에서 북한은 남한을 공격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라로크 소장이 제시한 결론이었다.

군사력비교와는 달리 군사비 지출은 정확한 객관적 근거를 보여준다. 미국국방정보센터에서 제시한 군사비 지출 비교(1988)는 남한이 군사비 지출에서 2배 이상 앞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세계적인 권위의 영국 전략문제연구소(IISS)와 스톡홀름 평화문제연구소(SIPRI)의 군사비 비교 자료도 이와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미 남한의 군사비 지출은 75년부터 북한에 비해 우위에 놓이기 시작해 80년대에 들어서는 2배 이상의 압도적 우세를 보인다. 스톡홀름의 자료는 북한군사비의 점진적인 증가를 보인 반면, 영국 IISS 자료는 85년부터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이 자료에서조차 이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다. 더욱이 미행정부나 국무성, 국방성 관계자들의 의회증언 등을 통해서 북한의 군사비가 급증했다는 언급이나 자료제시를

〈표 2〉 남북한 군사력비교

	북한	한국	주한미군
총병력	약 83.8만명	약 59.8만명	약 4.3만명
병력	약 75.0만명	약 52.0만명	약 3.0만명
유형	보병사단 24 자동화및기계화보병사단 5 기갑사단 2 방공사단 2 독립기갑여단 7 독립보병여단 9 특수작전여단 22 중포병연대 2 박격포연대 2 SSM 대대 6	보병사단 19 기계화사단 2 특수전여단 7 방공여단 2 SSM 대대 2 SAM 여단 2	보병사단 1
해군	합정 약 510호 약 7.0만톤 주요함정 호위함 2 잠수함 19 W급 4 R급 15 미사일고속정 34 오사급 12 코마급 8 소통급 8 소저급 6	약 150호 약 9.0만톤 구축함급 17 구축함 11 호위함 6 미사일 고속정	지원부대뿐 약 400명
공군	해병 작전기 약 700대 주요기종 주폭격기 IL-28 80대 전투기 SU-7 20대 MIG-19 160대 MIG-21 160대 MIG-15/17 280대	2개사단, 1개여단 약 2.2만명 지원부대뿐 약 1,200명 약 350대 전투폭격기 F-4 D/E 65대 F-5 A/B/E/F 260대 대개릴라전기 OV-10 G 16대 정찰기 RF-5 A 10대	지원부대뿐 약 100대 전투기 F-4 E 24대 F-16 48대 공격기 A-10 24대
참고	인구 약 2,010만명 병역 육·해군 5년 육군 3~4년	약 4,220만명 육·해·공군 2.5 해·공군 ~3년	

(주) 1. 육·공군은 밀리터리 밸런스(1985~86) 등에 의함.
2. 해군은 제인 해군연감(1985~86) 등에 의함.

하지않았던 점으로 보아 이 증가부분의 신빙성 여부는 많은 의구심을 남겨 놓고 있다. 그러나 1년사이에 군사비가 전년도대비 2배 이상의 급증현상을 보였다는 무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남한은 북한에 비해 보다 많은 군사비를 지출한 것으로 된다. 군사비 지출의 우위는 실제로 현대식 무기체계의 도입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어 군사력 증강을 의미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본다면 남한의 군사력 증강 정도는 이미 75년부터 북한을 앞지르고 있었으며, 이같은 점은 80년대에 들어서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과 거의 같은 수준이거나 앞지르고 있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현실적 근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호시탐탐 남침야욕을 품고 있다는 한국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쳐도 - 물론 그 주장이 이미 국민대중들에게 설득력을 잃은지 오래이지만 - 군사적인 측면에서 남한의 군사력만으로도 북한의 군사력에 대응하거나 또는 제압할 수 있는 전쟁억지력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한반도에서 북한의 전쟁발발 의지를 억제시키는 전쟁억지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주둔해 있다는 설명은 구차스러운 변명에 불과하다.

올해에 들어서면서 미국측에 의해 감군 계획이 여러차례 천명되고 있다. 한미 양국 정부는 90년 1월 30일 주한 미공군기지 5개중 3개 - 대구, 광주, 수원 - 기지를 92년 7월까지 철수해 오산 및 군산 2개기지로 통합하겠다고 동시에 발표했다. 그리고 한미 양국의 언론들은 이제 주한미군감축이 시작된 것이라고 해설을 붙였다. 그러나 언론의 이런 시각과는 달리 리처드 체니 미국방장관은 이같은 미군기지 축소계획에 대해 언급하면서 주한미군의 전력상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물론 주한미군 감축을 위한 시도 80년대 이후 처음있는 일이라는 하지만, 이런 조치가 소련의 평화공세에 밀려 불가피하게 취할 수밖에 없는 조치인 만큼 평화정책의 차원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오히려 이번 조치는 평화정책과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이같은 요구를 상당한 정도로 회색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방위비 분담과 파섹스 등 대규모 군사훈련을 통해서 한·미·일 3각군사동맹체제는 상당한 수준으로 완성단계에 들어서, 더 이상 직접적으로 수만명의 군대를 배치시킬 필요성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역 군사동맹 체제 아래서는 단 1명으로 구성된 군대만 주둔한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필요로 할 경우 연계의 근거지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 감축이 있다고 해도 이전과 다름없는 군사적 지배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미국과의 군사문제에서 대등한 관계를 정립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미국의 태평양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한국에 부여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정신이 재검토되어야 한다. 즉 상호방위조약은 국가간 방위지원 역할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어느 일국이 큰 일국의 역할을 위한 종속적 위치에 놓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여기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국가의 방위는 외적 방위만이 아닌 내적 방위, 즉 나라의 민주화도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며 따라서 독재정권이 수립 혹은 유지될 수 있는 요인을 외부에서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군에 대한 군사 작전지휘권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이럴 경우에만 자기 군대에 대한 스스로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보장장치가 확립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며 이에 대한 권리를 항상적으로 우리 민족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미군의 군사작전지휘권 장악을 가능케했던 물리적 근거인 주한미군을 전면 철수시켜야 한다.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한명의 군대라도 존재하는 것은 이를 매개로 군사적 지배 간섭을 가능케 하는 '매개근거'가 있기때문에 전면철수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단지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서 단계적 감축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전면 철수라는 보장과 확실한 약속아래 진행될 때 본래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결국, 한 나라의 자주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위하고 유지시킬 수 있는 힘을 가져야하며 이에 따라 자주국방은 한 나라의 자주성 확립여부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확립하는 것은 우리시대의 가장 절박한 문제인 것이다.

2. 휴전협정과 평화협정

김세진, 이재호 열사 추모사업회

(전쟁이나 평화나 새날기획)

올해 통일운동에 대한 각계각층의 열망이 고조되고 다양한 실천이 활성화됨에 따라 한반도 평화의 문제도 중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더구나 세 3세계국가와는 달리 한반도에 있어 '평화'의 문제는 '통일'과 직결된다. 뿐만 아니라 상호 규정성을 가지면서 결합되어 있다.

평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전쟁의 위협이 상존하는 것은 바로 한반도의 분단상황 때문이며, 평화구조가 정착되지 않는 한 통일의 길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군사적 대결과 긴장유지의 상태는 민족의 화해와 대단결을 가로막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민족의 자주권을 침탈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이에 따라 통일운동이 활성화되는 지금 '휴전협정'의 폐기와 '평화협정'의 체결 그리고 남북 불가침선언 요구가 제기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더구나 지금까지 통일운동의 주된 흐름이었던 자주적 교류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노태우 독재의 기만적 술수를 폭로하기 위해서도 '평화'에 대한 문제제기와 투쟁이 매우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불매 지난 7월 27일 고려대에서 개최된 '평화협정체결 결의대회'는 매우 중요한 투쟁이었다. 그리고 8월말 9월초로 예정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및 범민족대회' 역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흐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휴전협정'과 '평화협정'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 '남·북한평화협정체결' 주장이 그 단적인 예이다. 정부측의 주장은 차치하더라도, 사회운동단체 혹은 애국민주인사가 위와 같은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자주 발견된다.

이에 이 글에서는 '평화협정'체결이라는 우리의 구호가 대중화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1. '휴전협정(정전협정)'과 '강화조약(평화협정)'이란?

'휴전협정'이란 전쟁을 잠시 쉬자는 약속이다. 어느 한편의 무력이 다른 한편의 무력을 압도하여 상대방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없을 때 전쟁은 교착상태에 빠지고 전쟁 당사국은 내외의 압력에 의해 휴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휴전이란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무장력에 의한)를 중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을 공식 문서화하는 것이 휴전협정이다. 휴전협정은 전쟁 뒷마무리의 시작일 뿐 그 완성은 아니다. 대개의 경우 '휴전협정'은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설치', '적대행위의 종식',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군사정전위원회 설치' 정전협정 이행여부를 감시하는 '중립국 감시위원회 설치' 그리고 '전후처리를 매듭짓고 완성시키기 위한 방책을 모색할 것' 등을 담고 있다. 외국군대가 개입했을 경우에는 외국군철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따라서 전쟁을 낳은 근본원인—분쟁의 소지—을 해결함으로써 전쟁 당사자간의 적대적 긴장 관계를 우호—선린 혹은 화해의 관계로 바꾸기 위해서는 별도의 협정이나 조약이 필요하다. 이러한 별도의 협정이나 조약이 바로 평화협정 또는 강화조약인 것이다. 즉 평화협정은 전쟁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일반적 절차이다. 역사적으로 모든 전쟁은 전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정전협정과 강화조약을 포함하고 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둘중의 하나가 생략되기도 하고 결합된 경우도 있다. 또한 각각의 협정이나 조약이 담는 내용 역시 각기 다를 수도 있다. 이것은 전쟁의 성격 그리고 종전 당시의 국내외적 상황에 기인하는 것인 바, 규격화된 틀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현대 외교사에서 평화협정은 대체로 세 가지 형태로 체결되어 왔다. 그 첫째 형태는 분쟁당사자 간에 협상이 재개되어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다(회의형식으로 '대결형식'을 취한다). 둘째 형태는 제 3자가 분쟁을 중재하여 합의에 도달하게 하는 경우이다(회의형식으로 '원탁회의'를 취한다). 셋째 형태는 양측이 합의한 독자적인 제 3자(대개의 경우 국제사법재판소)가 타결책을 결정짓는 것이다. 1954년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해 '제네바회담'이 개최되었는데 남한과 미국측은 첫째 형태를, 북한과 중국은 둘째 형태를 주장하였다(뒤에서 보다 자세히 고찰할 것임). 1968년 8월에 성립된 이란—이라크전쟁의 휴전은 UN사무총장이 중재하였고, 실제 전쟁종결의 문제는 양측의 직접대화와 협상으로 결정키로 합의한 것이었다.

평화협정이 전쟁당사자들 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는 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역사적인 예를 들어보자. 예컨대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교전국이었던 중·일 양국의 관계는 70년대 들어 급진전하였다. 양국은 국교를 정상화하고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상호 선린의 관계를 맺는 과

성에서 72년에서 '중·일국교정상화공동성명'을 발표하였고 1978년 8월에는 '중·일평화우호조약'을 체결하였다. 양국은 1972년 9월 27일 발표한 '중·일국교정상화공동성명'에서 일본의 다나카수상이 「과거에 일본국이 전쟁을 통해서 중국 인민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사실에 대하여 그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한다」라고 말하고 그 사과를 받아 주 으래 수상이 다음 항목에서 「중·일양국 인민의 우호를 위하여 중국은 일본국에 대한 전쟁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말했다. 공동성명으로 신뢰의 기반을 갖춘 양국은 이후 1978년 '중·일평화우호조약'을 체결하여 전쟁으로 인한 적대관계를 청산한 것이다.

반면 소련과 일본의 경우엔 1955년에 외교관계를 회복하였지만, 아직도 평화협정을 맺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사할린 등 4개 섬의 영토반환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일본은 4개 섬을 반환한 뒤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하는 반면 소련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다른 곳에 있는 듯하다. 사할린 등 4개 섬의 반환문제는 일본 국민들의 반소감정을 부채질 하는데 호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소련과 적대관계를 청산하지 않은 일본정부는 이를 군국주의 재무장에 활용하고 있다. 일본정부가 군국주의재무장화 정책을 계속 추구하는 한 이에 장애가 될 평화협정의 체결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화조약이 체결되지 않아 적대적인 관계가 결국 전쟁으로 다시 치닫는 경우도 있다. 바로 베트남이다. 1954년 제네바회담에서 북베트남·프랑스·미국 등 관계국 모두가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베트남정부만이 이를 거부하였고 이로 인한 휴전상태의 지속은 결국 전쟁으로 확산되었다.

이상 휴전협정과 평화협정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살펴보았다. 그러면 다음으로 '평화협정 체결'의 정당성을 인식하기 위해 '휴전협정'에 의한 준전시상태가 남한사회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2. 휴전상태하의 남한사회와 평화협정체결의 정당성

'휴전협정'이 지속되는 상태는 쉽게 말해 '준전시상태' 그리고 '전쟁준비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어느 일방이 다시 전쟁을 개시한다 해도 도덕적인 규탄은 받을 망정 국제법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휴전상태이다. 또한 휴전협정 조인 당사자간에는 분쟁의 소지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늘 적대적 긴장관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으며 무제한적 군사적 대결로 인해 불씨를 안은 화약고와 같은 것이다.

게다가 휴전상태는 당사자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당사국내의 사회구조에도 커다

란-경우에 따라서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휴전상태가 분단상황과 직결되어 있는 한반도에서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휴전협정' 지속에 의한 준전시상태는 분단상황과 맞물려 곧바로 남북간의 군사적 대결의 참여화로 나타나며,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반공·반북의식의 강화에 따른 안보논리'가 절대화된다.

'군사적 대결의 참여화'와 '반공·반북의식의 강화에 따른 안보논리의 절대화'는 민족대결의식을 심화시켜 통일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남한사회의 민주·민권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게다가 북의 남침위협을 서지한다는 명분아래 주한미군의 주둔과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행정협정' 등 제반 불평등 연속조약을 합리화시킴으로써 민족의 자주권을 송두리째 유린당하고 있다. 게다가 막대한 군사비(국가예산의 32.8%, GNP의 6%)를 지출함으로써 민중의 복리증진을 가로막고, 오히려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휴전상태는 민족의 자주권을 침탈한다.

휴전협정에 의한 준전시상태가 해소되지 않음에 따라 무엇보다 먼저 우리 민족은 자주권을 미국에 침탈당하고 있다. 휴전협정의 지속에 따른 안보논리의 절대화에 의해 이땅에는 4만여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행정협정' 등 불평등 연속조약에 의해 남한은 미국의 속국으로 전락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남한 전역이 미국의 군사기지로 사용될 수 있으며(제4조), 군사작전권문제와 결합하여 한국군을 용병으로 사용하고 있다.(제3조) 또한 '치외법권'을 인정하는 '한·미행정협정'에 의해 미군이 '살인·강도·강간·폭행' 등 온갖 만행을 저질러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실정이다. 게다가 십만이 넘는 젊은 여성들이 미군을 상대로 몸을 판고 있다.

어디 이 뿐인가? 미국은 '한·미연합사령부'에 한국군을 편제하고 군사작전권을 보유함으로써 군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구조에서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권력을 장악한 군부를 통제하는 세력이 미국이라면 이나라 정치권력의 실질적 담당자는 바로 미국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뿐만아니라 미국은 사회전반을 통제하고 있다. 남한 사회는 '유사시를 대비한다'는 명목하에 모든 체계가 군사화되어 있고 군사적 목적을 제일의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웬만한 주요 산업체는 예외없이 방위산업체이며, 국민 대부분은 현역군인, 예비군, 민방위대에 편입되어 있고 고등학교·대학교에서는 군사훈련이 실시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인적·물적자원은 '자원관리법'에 의해 일단 유사시 총동원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일단 유사시에 모든 체계는 군사체계로 전환되며 '군작전권지휘계통'에 의해 통제받게 된다. 군작전권을 미국이 보유한 현실을 볼때 미국은 이나라의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끊임없는 내정간섭을 통해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있다. 심지어는 군사쿠데타를 부추겨 나라의 실서를 뒤집어 엮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자주권이 부정되고 있다는 표상은 전두환과 노태우의 방미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허락을 받으러 미국에 인사를 가야 하는 현실이 민족 자주권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

이렇듯 민족의 자주권이 절대적으로 부정되는 현실은 어디에서 기초하는가?

그것은 다름아닌 휴전상태이다. 휴전상태의 지속에 따른 안보논리의 절대화는 미국을 은인 혹은 우방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있으며 또한 위와 같은 사회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실사 인식한다 해도 안보논리에 의해 이를 당연시여기거나 혹은 '필요악'처럼 생각한다.

만일, 휴전협정이 폐기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된다면 안보논리의 절대화에 따른 미국의 자주권침탈은 명분이 완전히 박탈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평화협정'은 민족자주권회복의 첫 걸음인 것이다.

휴전상태는 조국통일을 가로막는다.

민족이 통일하기 위해서는 북한 동포를 같은 민족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휴전이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전쟁을 잠시 중지한 상태이고 따라서 상대방을 전쟁의 대상,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태이다. 통일로 나아가는 길에서 아직도 남쪽이 북쪽을 북쪽이 남쪽을 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어떻게 통일이 가능하겠는가? 통일의 전제조건은 남과 북이 함께 살 수 있는 신뢰와 환경의 조성이다. 이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평화를 기록하는 것이다. 남북간에 신뢰회복을 방해하는 것은 북한으로부터의 남침위협이 있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이러한 주장은 한국전쟁을 겪은 국민들의 피해의식이 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생각해보자. 155 마일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쌍방간에 200 만에 달하는 군병력이 대치하는 현실에서 문화교류 혹은 스포츠교류를 통해 상호 불신과 오해를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는가?

남북한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대결상태를 하루속히 종식하고, 평화의 분위기를 이루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휴전협정이 그대로 존속하는 한, 군사적 대결상태는 계속 유지될 수 밖에 없으며 현재 추세로 볼 때 더욱 강화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통일의 길은 한층 멀어지는 것이다.

통일의 길을 더욱 앞당기기 위해서는 아니 통일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휴전협정에 의한 군사적 대결상태가 종식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 '휴전

협정'의 폐기를, 평화협정의 체결을 원하는가 반대하는 가는 바로 통일세력과 반통일세력을 나누는 시금석이다.

휴전상태는 민주화를 원천봉쇄한다.

우리는 지난한 반독재 민주화투쟁 과정에서 대중적 항쟁이 들불처럼 번져 나갈때마다 등장하는 '안보논리'를 기억한다. 그리고 해방이래 계속되는 독재정치가 '안보'란 이름아래 합리화되는 것을, 5.16 군사쿠데타와 광주학살이 '국가안보'라는 이름아래 합리화되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작년 6월 민주화투쟁 당시에도 독재정권이 안보를 앞세워 위수령, 계엄 등의 협박을 가한 사실도 있다.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독재와 계엄 그리고 쿠데타와 학살을 두둔하는 안보논리가 바로 휴전상태의 지속에 의한 군사적 대결상태에 기인함을 앞에서 확인하였다.

현재의 휴전상태가 지속되는 한 독재는 계속될 것이고 민주주의는 계속 압살당할 것이다.

휴전상태란 준전시상태라고 앞에서 말한 바 있다. 전시에 후방에서는 계엄이 실시된다. 계엄이 실시되면 국민의 모든 기본권은 완전 무시된다. 정치적 자유는 말할 나위도 없다. 휴전협정의 지속에 따른 준전시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후방에서는 순계엄통치가 실시된다. 전시와 비교해 볼때 현상적으로는 계엄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계엄이 발동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얼핏보면 전시상태에 비해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비교적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헌법상의 갖가지 유보조건과 위헌적인 법률에 의해 철저히 제약당하고 있다.(언론·출판, 집회 및 시위, 학문·사상, 조직·결사, 파업의 자유 등 기본적인 민주민권의 제약이 바로 그것이다) 철도 공무원 노조의 파업에서 단적으로 드러난 '단체행동권'의 자유가 박탈당하는 것, 그리고 작년 7·8월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운동의 중심으로 부상한 대기업 계열회사들을 방위산업체로 지정하여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것도 국민들의 안보논리를 이용한 것임을 볼 때 휴전상태하에서 근로대중의 기본권 및 정치활동의 자유는 철저히 제약당할 수 밖에 없다.

근로대중의 노동 3권과 정치활동의 자유 국민대중의 민주적 제권리가 완전 보장되기 위해서는, 이를 억압하는 명분으로 작용하는 안보논리가 사라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휴전상태가 평화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휴전상태는 엄청난 경제적 회생을 강요한다.

남한의 1년 예산중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그 돈이 갖는 경제적 위력은 얼마만한 것인가?

88년 국가예산중 방위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2.8%에 달한다. 정부측 발표에

의하면 국가예산 총액은 17조 4천 6백 44억원, 국방비는 5조 7천 3백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5조 7천 3백억원이란 돈을 보다 실감나게 이해하기 위해 국민들의 이해와 결합시켜 보자.

- 노동자 5백만명의 월 임금을 10만원 가까이 인상시킬 수 있다.
- 농민이 안고 있는 농가부채 4조원 전액을 단 1년만에 탕감하고 농업발전 기금으로 1조 7천억원을 비축할 수 있다.
- 대학생 1백만명이 5년 넘게 무료로 대학을 다닐 수 있다.(우리나라 대학생 1백만명이 일년간 내는 등록금 총액은 약 1조원 가량된다)
- 140만채의 아파트를 건설하여 도시빈민과 서민의 주택난을 해소할 수 있다.(아파트 1채당 시공비용을 500만원으로 잡으면 총 비용은 5조 6천억원인데 다량건설로 인한 경제적 이점을 감안하면 더 많은 주택을 건립할 수 있다)
-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육성·발전시킬 수 있다. 자금 지원대상 기업체수를 1만개로 하면 기업체당 연간 5억 7천 3백만원씩, 1천개로 하면 57억 3천만원씩 지원할 수 있는 돈이다.

이상 몇가지 예를 들어 국방비로 지출되는 돈의 위력을 살펴보았다. 만일 이 돈을 생산에 투자하면 최소한 두배 이상의 결과를 가져온다.(87년 총투자액당 총생산액의 비율이 약 1:2이다.) 그러나 산업연관효과와 감군에 따른 노동력을 감안하면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물론 평화구조가 정착된다 할지라도 일정정도의 군대가 필요함으로 일정액의 군사비 지출은 불가피하다. 그렇다 할지라도 평화정착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실로 엄청날 것이다.

일년동안의 국방예산을 가지고 그것이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군사비를 지출했는지 알아보자. 70~83년까지 남한이 지출한 군사비 총액은 305억달러(미군축국: ACDA통계)이며 75~85년간 국정예산에 대한 군사비 지출 비율은 평균 28.4%였다. 현재 우리나라가 보유한 외채 총액 약 360억불과 대비해 보면 305억불(매년 이자로 40억불씩 지급)의 경제적 비중을 가늠할 수 있다.

게다가 최근들어 군사비의 비중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87년과 대비할 때 무려 16.6%나 증가하였으며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9.6%에서 32.8%로 강화되었다.(75~85년간 국정예산에 대한 군사비 지출 비율: 28.4%, 70~81년간의 군사비 지출 증가율: 5.5배)

날이 갈수록 군사비지출에 따른 경제적 희생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는 당연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제시하고 싶다. '국방비의 68%가

미국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환율을 현재 시세대로 710원으로 잡을 경우 국방예산 5조 7천 3백억원은 약 80억불에 해당된다. 이중에서 33억 1천 1백 80만불이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사들여오는 돈으로,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액 19억 6백만불(1천 6백만불 인상예정)등 약 52억불이 넘는 돈이 미국에 지출된다. 이는 국방예산의 약 68%에 해당된다.

여기서 우리는 국방예산의 과도한 지출이 갖는 또다른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엄청난 액수의 군사비를 지출해야만 하는 것 역시 휴전상태의 지속에 따른 군사적 대결상태에 기인한다. 전쟁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쌍방간의 군사력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균형논리'는 사실상 무제한적 군비경쟁을 가져온다. 그간의 역사가 이를 말해준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소위 '발상의 전환'이다. 그것은 쌍방의 군사력을 균형있게 증강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있게 감축하는 것이다.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평화협정인 바, 그 중요성이 새삼 강조된다.

휴전상태는 핵전쟁을 불러온다.

현재 남한에는 1천 1백여개의 핵무기가 들어와 있다. 그리고 오산, 군산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미국의 핵기지가 들어와 있다. 핵무기가 언제 들어왔는지는 공식발표가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 다만 1957년 '무기반입금지'를 규정한 '정전협정' 제 13항 2을 파기할 것을 통보하면서 미국은 남북간의 불균형이 주로 공군력에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를 만회한다는 명분하에 미국은 한반도에 신형 젯트기가 원자폭탄운송이 가능하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때, 1957년경부터 핵무기반입이 시작되지 않았나 하는 추정이 가능하다.

핵무기의 존재가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80년대 이후이다. 그러나 아직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핵무기가 한반도의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과연 그러할까?

핵무기가 남한에 존재하는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미국측의 발표를 보자.

「주한미군은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며, 주한미군은 재래식 전쟁준비를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핵전쟁의 준비를 추진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미국무장관 헤이그)

이 발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반도는 미국의 세계 핵전쟁 전략의 수행을 위한 핵저장고이며 동시에 미래의 대비 핵전쟁터라는 뜻이다.

다음의 보고서를 보면 핵무기의 성격이 더욱 분명해진다.

「소련이 중동산유지역에 개입할 경우, 미국은 소련의 군사력을 분산시

키고 석유자원 지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동북아시아의 동맹국 군사력과 함께 북한을 공격하고 북한에 대한 신세 해방력을 감행한다.
(방정 : 필자) (미 국방장관 와이버거, '83년 국방보고서'에서)

북한으로부터의 위협만을 들어온 우리에게 북침의 가능성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가능성은 실질적으로 상존하고 있다. 이 가능성은 77년 이래 매년 봄 실시되는 '팁스피리트' 훈련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이 훈련은 핵전쟁을 상정한 군사훈련이다. 1977년 이래 매년 참가하고 있는 제7함대 소속 항공모함 미드웨이호는 핵무기를 적재 조립·발사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핵군함이며, F15와 F111의 비행대대, B52 전략폭격부대, 제25 보병사단 등은 모두 예외없이 핵무장부대이다.

더우기 핵무기의 사용을 결정하는데 있어 한국은 아무런 발언권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핵무기사용을 결정하기 위해 주한미사령관은 양국 대통령에 핵무기사용을 권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자동적으로 동의하면 모를까, 민족적 입장에서 '거부'할 경우,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의 의사가 어느 정도 참작될 것인지 의심스럽다. 대한민국 국군의 작전지휘권이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이양되어 있는 현실적 조건을 볼 때 결과는 가히 뻔하다. NATO와 비교할 때* 한반도에서 핵무기 사용은 '덜 복잡하다'는 마이어 미육군 참모총장의 말 또한 의미심장하다.

안보논리에 덧붙여 핵무기가 전쟁을 억제한다는 '핵억지론'을 받아들인 국민들의 왜곡된 인식을 이용, 미국은 한반도를 어느새 핵기지로 만들고 핵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평화의 문제는 민족의 생존과 직결된다. 휴전상태의 지속으로 인한 핵무기보유가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 전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무기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휴전협정이 폐기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핵무기가 이땅에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우리는 '평화협정'이 전쟁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일반적 절차라는 사실외에 '자주, 민주, 통일, 전쟁위험해소, 민족의 복리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 등을 근거로 '휴전협정폐기'와 '평화협정체결'의 정당성을 확인하였다.

* 북대서양동맹(NATO)에서는 동맹의 조약상 및 정치적 합의로써 미국의 핵전략에 관해, 미국은 그 15개 동맹국 모두와 사전협의를 하게끔 되어있다.

III 한반도 평화군축 실현의 제과제

3. 핵전쟁의 위협과 비핵지대화 운동의 방향

김세진, 이재호 열사 추모사업회

(새날 창간호, 새날 기획)

핵무기가 사용된 경험은 인류 역사상 히로시마 나카사키에 투하된 단두번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고 핵무기의 발달은 전 인류에게 죽음의 잿더미를 몇 번 안겨주고도 남을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핵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투쟁이 나오고 있다. 물론 핵전쟁의 방지가 인류에게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을 가져다 주진 않는다. 현재에도 곳곳에서 핵무기는 사용하지 않지만 군사적 충돌은 계속해서 전개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그러나 핵전쟁을 막는다는 것은 다른 모든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인류의 생존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살아남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정도로 핵의 위력은 무섭다.

우리는 그동안 송미사대주의에 쫓기고 같은 민족인 북한을 철천지 원수로 낙인찍어 바로 우리의 목을 조이고, 민족과 조국강토를 초토화시킬 핵무기주둔에 무관심 또는 당연시 해 왔다. 그러나 핵무기 실상이 점차 알려지고 민족자주의식이 널리 전파됨에 따라 핵전쟁의 참화로 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그중 유력한 방도로 '비핵지대화'가 제기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의 반핵운동을 주체적으로 수용해 가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한반도에서 비핵지대화운동 전개에 도움이 되도록 한반도 핵배치 실상과 비핵지대화 운동의 현황과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1. 한반도 핵배치의 실상

우리 나라에 핵무기가 배치되었다는 추측은 1958년 UN군 사령부의 발표 아래 공공연한 비밀로 되어있다가 1975년 6월 20일 미국무장관 솔테진지의 기자회견을 통해 확인한 사실로 드러났다. 그리고 87년 4월 9일자 중앙일보는 뉴욕타임즈지 보도를 인용, 주한미군이 천여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발표하였다. 이처럼 주한미군의 한반도 핵무기배치는 엄연한 사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가 소위 '전략적 입장과 원칙이라는 것을 뒤 핵무기 배치 사실 자체마저도 가부간의 확인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배치된 핵무기의 종류, 숫자, 배치현황 등은 정확히 밝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동안 나온 추측성 자료들에 근거해볼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은 명확히 추정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에 배치된 미군의 핵무기는 모두 전술핵무기라는 점이다.

두번째, 우리나라에 배치된 핵무기의 출량은 한반도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민족을 전멸시키

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라는 점이다.

미국 정보센터의 '디펜즈 모니터' 지 76년 1월호에 의하면 당시 우리나라에는 '핵지뢰 25-50발, 서전트 지대지 미사일 12발, 어네트론 미사일 80발, 나이카하클릭스 지대공 미사일 144발, 155밀리톤 핵폭탄 152발, 203밀리핵폭탄 56발, F-4팬텀전투기 탑재 핵폭탄 192발, 합계 646-661발이 배치되어 있었다고 하며, (1985년 5월 125회 국회 본회의의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대정부질의 과정에서 한반도에 배치된 핵탄두가 1020기나 되고 그 위력이 일본에 투하된 원폭의 1750배 이상의 위력을 가진다는 발언이 있었다. 이러한 발표내용이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지녔는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일정정도의 오차를 인정한다 치더라도 히로시마에 13KT의 핵폭탄이 투하되어 폭발직후 6만 8천명이 사망했고, 1945년 말까지 14만명 1950년 말에는 20만명이 달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 배치된 핵의 위력을 쉽게 알 수 있다. 우리 민족의 전체인구를 7천만이라고 했을 때 히로시마 원폭의 1000배의 핵무기만으로도 전 민족을 일순간에 말살시킬 수 있고 500배의 축발만으로도 5개월안에 한반도를 무인지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세째, 우리나라에 배치된 핵무기가 일단은 한반도에서 사용될 것이라는 점이다. 핵무기의 사용지역은 그 운반수단에 의해 결정되어 지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핵무기 운반수단은 F-4팬텀기, F-16기와 전투폭격기와 155밀리포, 8인치포동의 대포, 그리고 나이키 허리트미사일, 어네트론 미사일, 랜스미사일 등의 단거리 미사일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기동성은 뛰어나지만 활동범위는 좁다. 비록 주전장과 전선이 이동됨에 따라 그 활동범위의 상대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 배치된 핵은 일차적으로 한반도에서 쓰일 수 밖에 없다. 더구나 미국이 유사시 북한에 대한 핵공격을 장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불을 보듯이 분명하다.

네째, 우리나라 전체가 미군의 핵기지라는 점이다. 주한미군의 핵배치현황을 일체 비밀로서 공식보도된 바 없으나 선과자들의 노력과 외국군사문제 연구소등에 의해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그 중 재미한인 청년연합에서 나온 '주한미군의 핵전쟁 기본시설'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위의 도표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전국이 주한미군의 핵기지나 핵전쟁지휘소로 가득차 있는데, 이는 환경오염의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되고 있다.

2. 한반도에서의 핵전쟁 위협

미국은 태평양 지역에서 여러차례의 핵위협을 가했던 경험이 있다. 첫번째는 한국내전 당시인데, 중국군인이 참전하여 지상전이 장기화되고 전세가 답보상태에 빠지자 미국의 전략담당관들을 핵병기 사용검토를 계속받게되고 1951년 3월 존스홉킨스 대학의 작전연구반은 '핵병기의

'전술적 사용' (TACTICAL EMPLOYMENT OF NUCLEAR WEAPONS) 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였을 때 핵병기의 위협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B-36 폭격기가 '빅스 테이크'라는 연습을 전개하며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소련과의 전면전 회피와 세계 여론에 대한 의식으로 좌절되었다. 두번째는 1954년 디엔 비엔푸의 프랑스부대가 패배하여 북베트남군에 포위되었을 때이다.

이 프랑스군을 구출하는 미국의 '볼차작전'에는 필리핀이나 베트남 해상의 제7함대의 핵항모로부터 발진한 폭격기가 핵병기를 투하하는 작전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 계획은 미국 대통령, 국무장관, 5명의 합동참모본부 인원 등 4명의 승인을 얻었으나, 미 육군의 반대 (당시는 한국 전쟁 직후였기 때문에 아시아에서의 지상전을 꺼려했음) 와 자기네 군인이 베트남군과 함께 전면될것을 두려워한 프랑스의 반대로 중지되었다.

세번째는 1958년 제2의 대만위기 때인데 당시의 태평양 사령관 해리스 펠트제독은 자신의 회상록에서 '당시의 우리모두는 전술 핵병기를 사용하여도 대규모 전쟁으로는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였고 다른 방법은 전혀 계획속에 없었다' 라고 솔직하였다.

이렇듯 대소봉쇄와 식민지 민족해방운동 압살을 위해서는 핵전쟁도 불사하는 미국의 전략은 그후 조금의 변화도 없었으며 다만 그 지휘체계와 운동방식만 변화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80년대 들어서는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위협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변화된 세계전략을 보여주는 '미국 84-88 회계년도 국방지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태의 전면보복, 제2격 전략이라는 핵억지전략에서 선제 제1격이라는 승전전략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한정핵전략을 표방하면서 전술핵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둘째, 특정지역 (중동이나 유럽)의 전쟁을 전세계규모로 확대시켜 소련의 군사력을 분산, 약화시키려는 동시다발보복전략을 확립했고 세째, 극동아시아의 중요성을 격상시켜 종태의 전략을 포기하고 유럽, 중동, 극동아시아 세 지역에서 세가지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세계전략속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의 '긴요한 이해상관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핵전쟁을 불사한다는 '사활적이해 상관지역'으로 격상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대한정책은 매년 실시되는 틱스퍼리트 훈련에서 구체화되었는데, 이 훈련은 방어훈련은 거의 실시되지 않고 공격작전, 반격작전이 주로 실시되고 있다. 더구나, 77년 이래 매년 미제 7함대의 핵항모 미드웨이호, F-13과 F-111 비행대대, B-52 전략총격부대, 핵무장부대인 제25보병사단, 전문핵사용을 전제로 한 NBC (핵, 생물, 화학무기) 훈련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미육군의 핵보병부대인 제5보병사단의 동훈련 참가는 이 훈련이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상징한 종합군사훈련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 또한 '소련이 중동 산유지역에 개입할 경우 미국의 동북아의 동맹군사력 (한국, 일본) 과 함께 북한에대한 핵공격은 감행' 할 전략을

짜놓았으며 83년 훈련에 미국의 핵미사일 적재 항공모함이 출동한 것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의 행동을 가상한 것이라는 미국방장관 와인버거의 국방보고서 내용과 틱스피리트 훈련이 미국의 동시다발 보복 선제 핵공격의 일환으로 치뤄지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처럼 미국은 한반도에서 대미 핵전쟁을 할 수 있는 모든 군사적 준비를 완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반도 내에서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준비도 완비하고 있다.

먼저 54년 한미간의 합의의사록에 의해서 미국이 군작전 지휘권을 소유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이상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성이 없고

간단하게 한미상호방위 조약이 어떻게 핵전쟁 발발의 가능성을 열어주는가를 간단히 언급하겠다.

4조 : 상호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 공군은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할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용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이 조항을 통해 미국은 핵비치를 한반도 어느 장소에나 아무런 제약, 제한없이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조 : 당사국중 어느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여 강화시킬 것이며...

3 조 : ... 각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은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국의 헌법상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이 조항은 쌍방의 합의없어도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핵무기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당하는 한민족의 동의 없이도 미국이 핵무기라는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더우기 수만리 외국에서의 전쟁을 이유로 한반도의 핵전쟁화 될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한반도에서 비핵지대화란 한반도 군사대결 구조의 완전한 청산과 동일시될 수는 없다. 더 위기의 근본적 원인인 민족 자주화의 실현을 직접적으로 가져오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이 한반도를 감점하고 있는 핵심적 사항 중 하나가 대소전진 군사기지화에 있기 때문에 땅덩어리 넓이에 어울리지 않는 수천발의 핵무기를 주둔시키고, 실제로 핵전쟁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 현실에서 '비핵지대화'는 미국의 식민지 정책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것이된다. 뿐만아니라 절박한 민족생존의 문제를 해결함에 따라 민족의 대 화해

와 단합을 실현시킬 수 있는 유리한 정세를 조성한다. 한반도 평화실현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고, 외세의 전쟁음모에 저항하여 나간다면 여타의 군사정치적 대결구조의 청산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따라서 '비핵지대화'를 비현실적이라 폄하하면서 미국과 남한정부는 명백한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는 '비핵지대화' 운동은 단합될 힘과 핵무기에 대한 저항의지만 뚜렷하다면 결코 비현실적일 수 없으며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 운동임을 보여준다.

1. 세계 비핵지대화 운동의 현황

1958년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동서독을 포함하는 중부유럽을 비핵지대화라하는 폴란드 제안을 시초로 1961년에 아프리카를 비핵지역으로 하자는 결의가 국제연합에 회부되면서 '비핵지대화안'은 반핵운동의 한 내용이 되기 시작한다. 그 이전 반핵운동은 핵무기보유 강대국에 대한 청원, 핵무기의 위험성을 폭로하고 자제와 각성을 촉구하는 양심적 지식인의 운동이 주류를 차지하였으나 핵무기 주둔의 확산과 주둔지역의 당사자들이 자신의 생존권에 대한 위협을 각성하기 시작하면서 '비핵지대화운동'은 활성화되기 시작한다. 물론 초기에는 UN이 미국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국제정치의 현실과 소련에 대한 핵군사력의 우위를 자신하며 지속적으로 군사력 확대를 꾀하는 미국의 방침으로 인해 이 비핵지대화 제안은 쉽게 외면당하고 말았다. 앞에서 이야기한 아프리카 비핵지대화안도 미국의 사주를 받은 44개국의 기권으로 인하여 좌절되고 말았다. 그러나 자신의 절박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투쟁이기에 결코 멈추어지지 않았으며 그 대의를 점차 확대해 간다.

최초의 비핵지대화안은 1959년 12월 1일에 조인되고 1961년 6월 23일 발효된 남극조약에 나타난다. 이는 1957년에서 58년의 국제지구관측팀을 계기로 남극의 소속 문제를 둘러싼 다투기현상을 지양하고 남극의 평화적 이용, 과학적 조사의 자유와 국제협력력을 추진하는 것을 위한 조약이며 1985년 2월 1일 현재 30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이 조약 제5조 1항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또 남극지역에 있어서 모든 핵 폭발 및 방사능 폐기물의 동지역에서의 처분을 금지한다. 이 조약은 핵무기위협성에 초점을 맞춘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핵무기의 위험성이 존재하지도 않았으나 인류에게 핵위협성의 과성된 결과로 인류공동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여러국가들의 합의로 볼 수 있다. 자국, 또는 인접지역에서 스스로 핵잠항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결의로서의 선언은 67년 라틴아메리카 핵병기 금지조약이 최초이다. 이 조약은 1967년 2월 14일 채택되고 1968년 4월 발효되기 시작하여 1985년 2월 1일 현재 25개국에서 효력을 가진다. (아르헨티나 미비준)

이 조약은 라틴아메리카 제국이 핵병기의 실험, 제조, 생산, 취득, 수령, 사용, 저장, 설치,

백지를 행하는 것을 금지한다를 제 1조로 하고

핵병기국은 조약의 체결국에 대하여 핵병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는 위협을 행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를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이 서명한 부속의정서 제 3조에서 선언하고 있다. 이 전문에서는 라틴아메리카의 군사적 비핵화의 목적은 그 영역을 영구히 핵무기로부터 해방시키고 그 영역에 대하여 가해질 우려가 있는 핵공역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에 있다 라고 밝히며 동조약이 전면적이고 완전한 군축으로 가는 강력한 요소로 된다고 자신한다. 물론 쿠바가 푸에르트리코의 비핵화와 쿠바영역내의 관다모 미군기지의 철거를 조건으로 조약에 미가입한 것,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의 국가가 평화 목적의 핵폭발 실험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등 자체 한계를 가진다. 또한 자국의 숙명 식민지의 비핵화를 정한 부속의정서에 서명을 하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비핵지대화운동의 활성화와 더불어 UN에서는 1968년 핵무기의 미확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다. 여기에는 대한민국도 1975년 서명한다.

제 1조 핵무기의 보유국인 조약당사국은 직접 간접적인 방법을 불문하고 어느 누구에 대하여도 핵무기나 기타 핵폭발장치 또는 그러한 무기와 핵폭발장치의 관리를 이양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핵무기 비보유국이 핵무기 혹은 기타 핵폭발장치를 제조하거나 또는 획득하고, 그러한 무기 또는 폭발장치의 관리를 획득하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원조, 장려 또는 권유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제 2조 핵무기 비보유국인 조약당사국은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을 불문하고 어떠한 양도자로부터도 핵무기와 기타 핵폭발장치 또는 그러한 무기와 폭발장치의 관리양도를 인수하지 않는 것과, 핵무기 혹은 기타 핵폭발장치를 제조하거나 또는 획득하지 않을 것과 핵무기 혹은 기타 핵폭발장치의 제조에 대한 어떠한 원조도 추구하거나 받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를 내용으로 1985년 2월 1일 현재 124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UN에서 비동맹회의 진영권의 발언권이 강화되고 저후 세계적 반핵운동의 성과물에 기초하여 결의된 이 조약은 핵병기국을 아메리카,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으로 하고 핵병기국의 증가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핵병기국의 핵군사력 확대와 다른 나라로 핵무기설치를 확대하는 것은 금지하지 못하는 결정적 한계를 가진다. 비핵병기국은 군축 특히, 핵군축 및 비핵병기국에 대한 핵불사용 등등을 요구하였으나 핵병기국은 '군축을 성실히 이행한다. (6조) 'UN 헌장에 기초하여 행동한다'로 하여, 자위권에 기초한 핵사용의 여지를 남겨 놓았다. 그래서 한국도 서명하였지만 '한국에 핵무기를 주둔시킬 수 있는 권리'와 '북한에 대한 핵공역' 운운할 근거는 여전히 남아 있다. 비핵지대지역은 점차 확대되어 1970년 제 3회 비동맹제국총회 회담에서

결정되고 1971년 UN 총회에서 인도양 평화지대안이 결의된다. 선언 결과의 내용은

1) 인도양을 상시 평화지대로 본다.

2) 인도양에 있어서 더이상의 군사적 주둔의 확대를 저지하고, 모든 기지 군사시설과 병참 업무 다른나라의 군사적 주둔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제거하기 위하여 강대국이 협의하는 것

3) 군사동맹이 없는 집단 안전보장을 수립하기위해 군함 및 군용기는 인도양 진영내의 한 국가에 대해서 어떠한 힘의 위협을 사용하지 않는 것.

이다. 이 안은 인도양의 전 공해구역에 대상으로 하고 핵병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까지도 부정하고 공해에서 해군연습 정보활동 및 병기실험 동등 광범위한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다음 단계에서 연안국 및 인접하는 배후국의 영역까지 외국군사기지를 철거하고 비자치지역을 포함하여 인도양 비군사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1984년 11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피지, 파푸아뉴기니아를 포함한 남태평양 회의가맹국은 남태평양 비핵지대에 관한 조약 초안을 마련하고 8개국이 조인하였다. 여기에 소련, 중국도 같이 조약을 하여 적극적 평화공세에 나서고 있으나 미국, 프랑스, 영국은 조약을 거부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노동당 총 이수상은 85년 2월 1일 핵실험 가능성이 있는 미국 함정의 기항을 거부하는 입장을 밝혀 미국의 군사적 지배음모에 타격을 가한다. 이상은 일국을 떠어 넘는 광역을 대상으로 인접국간의 공동 대응을 통한 비핵지대와 실현의 실패이다. 지역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에 이루어진 조약은 남극조약, 라틴아메리카 비핵화조약, 남태평양 비핵지대화조약이 있고 그외에도 남극조약과 성격이 유사한 우주조약 (1967), 해저비핵화조약 (1971)이 있다. 핵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광범위한 국가들이 공동의 보조를 취하는 것은 제국주의가 일국만을 대상으로 군사기지화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을 통합하여 군사동맹체제를 구축해나가는 현실을 반영한다. 제국주의의 군사적 침략에 대한 집단적 대응으로 세계평화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힘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한 국가에서 '비핵지대화'를 선언한 경우이다. 남태평양의 벨라루스는 그 최초의 예이다. 이 나라는 1981년 1월 1일 독립을 선언하였고 1980년 7월 10일 국민투표를 통해 벨라루공화국 헌법을 채택하는데 이 헌법의 내용에 비핵화를 선언하고 있다. 헌법 제 13조 6항, 제 2조 3항의 내용은 국민투표 총수의 4분의 3이상의 승인이 없으면 전쟁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핵병기, 핵무기, 가스무기, 원자력발전소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 동등의 유 핵물질은 벨라루 사법권이 행사되는 영역내에서 사용, 실험, 저장, 처분이 금지된다. 라고 되어있다. 이는 아메리카의 태평양에 있어서 군사행동에 중대한 타격을 가하는 최초의 노력이었고 원자력발전소와 그 폐기물도 규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에는 91년 이후 모든 외국군 기지를 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함과 동시에 이

내용에 기존 국제협정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외국 기지와 군대, 군대 시설을 필리핀내에서 금지하며 핵무기와 그 부품의 필리핀내 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의 특징은 핵무기부품의 금지를 명시한 것이다. 또한 핵무기의 수입, 관련장비보유, 저장, 핵병기탑재 선박 기항금지등을 내용으로 하는 반핵법안이 88년 6월 6일 상원에서 통과되기에 이른다. 법안으로 구체화된 경우는 거의 드물기 때문에 다른 비핵지대화안에 비해 매우 상세한 부분까지 규정하고 있다. 총 15조 중 제 5조 금지행위를 보면

어떤 사람도 은송이나 하역을 불문하고 핵병기 또는 핵부품과 그 구성부분을 필리핀 영역내로 가지고 들어오거나 또는 소유 보유할 수 없다. 필리핀 군사기지에 미합중국의 기존 군사 설비를 포함하여 필리핀 영역의 상, 하, 상공 어느곳에서도 본 4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핵병기 또는 핵부품, 구성부분 및 핵 병기관련 설비의 개발, 제조, 입수, 실험, 이용, 도입, 비축, 보관을 금지하여 또 필리핀 영역내에 어느곳에서도 핵무장육상수송수단이나 선박 그리고 해상 수송선, 잠수함, 항공기, 항공운송수단이 입항, 통과, 상주, 서비스 (수리보수)를 받는 것은 본조에서 금지한다.

를 규정하고 있다. 즉 핵병기, 핵부품 그 구성부분으로 금지된 물품을 확대하여 명시하였고 이 모든 것에 대한 개발 가능성까지 제한하는 점, 그리고 일시적 주둔까지 불허, 핵의 위험성을 최대한 방지하고 있다. 반핵과 외국군 기지의 철수를 동시에 제기하고 나온 것은 상당히 주목할만한 일이다. 왜냐하면 핵무기주둔과 미군사기지가 분리될 수 없기에

일본에서는 정부의 태도보다는 시민차원에서 반핵비핵지대화 운동이 제기된다. 원폭피해의 최초이자 최후의 희생자였던 일본은 일본군국주의화에 대한 직접적 반대보다는 핵 자체에 대한 반대에 기초한 운동을 전개한다. 민간차원에서는 1979년 4월 핵병기 제조, 보유, 반입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였는데 그 내용은 제목대로 '제조, 보유, 반입에 대한 금지'이다. 이 법률안의 통과를 일본 미국의 군국주의화에 대한 쉐기를 박는 의미도 지닌다.

2. 한반도 비핵 지대화의 방향

최근의 한반도 주변정세가 미, 소, 중국간의 데탕트분위기가 무르익어 감에 반하여 남한에서 핵군사훈련이 날로 규모를 확대해 가고 핵배치 상황이 점차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자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위한 제안이나서 관심의 초점이 된다. 이미 1981년 3월 16일 일본 사회당과 북한의 조선노동당 사이에 '동북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반핵 평화지대 창설에 관한 공동선언'이 있었다. 여기서서는 일본과 한반도 및 주변해역에 있어서 (1) 모든 핵병기의 철거, 파기, 핵병기와 생화학병기의 개발, 실험, 생산, 소유, 저장, 운반, 도입 및 사용을 금지하고 (2) 외국군의 군사기지와 외국군대의 철수 (3) 침략을 목적으로 하는 군사적 주둔의 해체와 새로운 군사동맹을 맺는 것을 저지하는 것 등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 구상이 최초로 한반도에서 비

핵지대화안의 구체화라고 볼 수 있다. 이어져 1986년 9월 6일 평양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평화를 위한 평양국제회의'를 통하여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촉구하는 선언을 채택한다. 이 내용의 골간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의 생산, 실험, 비축 및 사용의 금지 외국군의 주둔과 기지 철거의 내용을 포함한다. 남한에서는 86년 김세진, 이재호업사의 분신투쟁이후 반핵 투쟁이 점차 확대되어 왔다. 이에따라 제도권에서 87년 민주당의 공약의 하나로 '비핵지대화'안을 발표하였다. 물론 구체적 내용없는 선언에 불과하였지만 그것만으로도 큰 의의를 갖는다. 국제정세에 있어서도 좋은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1986년 7월 28일 고르바초프는 블라디보스톡 선언을 통하여 한반도 비핵지대화안을 지지한 바 있으며 1988년 9월 18일 평화 7개안을 발표하여 '소련의 태평양 연안과 중국 일본 한반도를 포괄하는 지역에서 군사대립을 완화하기 위한 다국간 회담을 개최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소련의 핵무기를 동결하는 조건으로 미국과 그밖의 핵대국도 핵무기 증강을 금지하길 제안한다'라고 하여 평화공세를 한반도 지역에서 구체화시킨 바 있다. 이며 내외에서 성장한 반핵평화운동의 역량은 한반도 비핵지대화의 실현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 물론 비핵지대화를 이루는 것은 단순한 법안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의 군사적 침략에 대항하는 투쟁의 결과물로 광범한 대중이 핵의 위험성에 대한 각성의 결과물로 생산되는 것이고 이를 제도적으로 확정짓는 것이 법안이나 조약이다. 비핵지대란 일반적으로 주로 조약에 의해서 핵병기의 사용, 제조, 저장, 실험, 배치 또는 도입 등이 금지되는 일정한 지역 또는 공간이다. 특히 비핵지대화는 청원, 촉구의 수준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을 스스로 정취하는 반핵운동의 구체화의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이다. 비핵지대화를 위해서는 비핵지대화의 영역 및 참여 협조하는 국가에 대한 규정 명확화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적 대상에 대한 규정 핵전쟁 유발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요소에 대한 규정이 엄밀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지대화의 경우 첫째로 이 지역의 국제적 성격과 남한의 집중적으로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는 조건에 의해 국제적 조약과 우리 민족의 생존권을 스스로 지켜나가는 반핵법안이 동시에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필리핀 벨라우의 일국내 법안을 채택한 국가의 경우 군사적 긴장의 정도와 나락간의 긴장성격이 낮다고 볼 수 있으나 한반도는 미 소 군사대결을 첨예하게 반영하는 지리적 조건에 의해 소련의 남한주둔 미군의 핵무기를 목표로 하는 핵무기 배치상황에 의해 미 소 남한북한의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실현하는 합의 조약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그 내용은 앞에서 설명한 각각의 예에서 유추될 수 있다. 또한 아무런 제한없이 핵무기가 미국에 의해 배치, 도입되어있는 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생존권 수호를 위해 필수적으로 반핵법안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두번째로는 일국내 반핵법안을 작성하는데 있어 금지대상의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핵무기에 대한 금지는 물론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핵무기로 조립가능한 부품까지 제한한 필리핀의 예와 핵발전소를 제한한 벨라루의 예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사실 발달된 현대 과학에 의해 핵부품은 쉽게 조립이 가능해 핵무기와 다를 것이 없기에 논쟁의 여지가 없다. 핵발전소의 경우에도 몇 차례 원전사고에 의해 그 위험성이 널리 알려지고 있어 제한이 요구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방법과 수준은 보다 엄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핵무기와 결합 가능한 전투기, 미사일, 잠수함 등등에 대한 제한도 요구된다. 만약 이 부분이 존재하면 핵전쟁으로 발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세계로 핵주둔의 근거를 제공하는 외국군 기지에 대한 철폐문제이다. 사실 대소전략에 의해 주둔하는 미군에게 핵무기의 문제는 주둔 이유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미군 기지의 주둔은 언제든지 핵전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추가한다면 현재 존재하고 있는 핵무기의 철폐시기, 방법, 또한 검증방법까지 규정이 있어야 한다.

이상에서 비핵지대화의 방향과 반핵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한반도를 비핵지대로 확고 만들기 위한 절박한 투쟁은 온 민족의 힘과 지혜를 동원해야 하고 광범위한 계층의 동참을 보장해야만 국제적 정세의 호전을 활용하여 성공시킬 수 있다. 아직껏 핵전쟁의 위험성에 대한 대중적 홍보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광범위한 계층속에서 반핵법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실질적 힘을 내와야 할 것이다. 공청회, 서명운동 등의 방법이 대중의식화의 진전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된다면 반핵법안을 획득하는 투쟁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부대명	임무
서울	주한미군사령부	태평양 통합군 산하 준통합군단이며 세계규모 군사지휘 통제기구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핵공격 명령을 받기위한 Console을 포함한 사령시설을 갖추고있다.
	한미연합사	한국에 있어서 최고 직급사령부로서 전시에 군지휘를, 병사에는 종합적인 계획입안과 막로업무를 담당함.
	미8군사령부	제한 미육군 최상위 병단임.
성남	?	Tango 합동통신 작전센터가 있으며 위 통제기구 시설과 핵공격을 받기위한 Console을 포함한 주한미군 지하 사령부가 있음.
동두천	캠프 케이시	제2보병사단 사령부로 주한미군 전투부대의 주력이며 핵화포와 핵파괴탄(핵지뢰)을 모두 운반하는 임무를 수행.
	캠프 캐슬	제2보병사단 아래의 제2공병대대로서 핵폭파장치 작전이 가능.
	캠프 에이스	한국 탄약 관리기구의 본부가 있으며 이는 육군 핵병기 지원부대의 주력 핵탄두를 주한 미육군이 최고 보안지역으로 확보하고있는 군산 공군기지 내 비축.
	캠프레드클라우드	한미 연합사령부로서 이전 명령은 한미합동 제1군단이며, 미 보병제2사단유 포함한 9개사단으로 편성된 합동사단.
	캠프 노텔리	제2보병사단 아래의 포병여단으로 핵능력을 가진 M109포 1개 대대가 있음. 핵발사 명령을 수행하기위한 비상행동설비 특수병기 훈련시설을 포함한 핵시설 비축.
	캠프에세디온즈	제2보병사단 아래의 8인치 포부대로서 핵공격 명령을 받을 수 있는 비상 행동설비 특수병기를 포함한 핵시설이 있음.
도봉산 무기고	이전에 제3미사일 병단 사령부가 설치되어 어네스트 존 육군군 미사일을 관리하여 왔다. (위 미사일은 동병단의 한국철수시 한국군에 이양됨)	
회덕	?	이전에 제 833탄약 중대본부가 설치되었으며 핵병기 저장소임.
오산	제314항공사단	한국에 있어서 공군의 최상위 병단 반전고화된 지하지휘본부들 갖추고 한미 합동 통제시설, 비상행동설비를 갖추고 있음.
	제51전술전투 항공단	핵능력 전투 폭격기 F-5E를 보유하고 있음. 핵공격 훈련을 관찰하는 전략 공군 레이더 기지 특공대 투입 작전부대가 있음.
	공군로렌 C/D국	전술 장거리 항법공격물의 위치파악을 위한 라이온 특공대, 네트워크의 일부
군산	제8전술전투 항공단	1981년에 F-4D도 한국에 있어 주한 미육군과 공군의 핵병기 저장기지, 핵폭탄?발, 8인치용 핵폭탄?발, 115미리용 30발 핵파괴탄과 핵지뢰 21개를 포함하고 있음. 특공대 투입 작전부대가 있음.
	제97전술전투 비행대	핵공격용 전투폭격기 F-4E보유. 한국에 있어서 예비전술 항공관제센터.
대구	공군로렌 C/D국	코멘드 라이온 네트워크의 일부. 한국에 있어서 예비 공군지휘센터.
포항	상동 상동	상동
갈유산	제1우주항공단	GEODSS에의한 인공위성 추적국.
	제2분견대	
장산	공군로렌 C/D 모니터국	전술 장거리 항법 목표 위치 지시를 위한 코멘드라이온 체인의 일부.
	해안경비대	북태평양 체인의 일부.

4. 팀스피리트와 태평양 연습 (PACEX)

전 원 하

(평화운동, 평화연구소, 1989)

1. 머리말

한반도에 열전(熱戰)의 포성이 멎은지 40여년, 그러나 누구도 이 세월이 평화의 시대였다고 말하지 못한다. 상대방에 대한 불타는 적의와 모해, 무제한의 군비경쟁, 전쟁위기를 일상속에 끌어들이는 끊임없는 전쟁연습이 민족의 생활을 지배해 왔다. 특히 80년대는 전쟁연습의 시대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70년대까지 각종 군사연습은 일반에게 통치수단의 일환으로 휘두르는 주민동원훈련이거나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을 확인하는 것 정도로 치부되었으나 80년대의 군사연습은 일반의 상상을 뛰어 넘는 것이었다. 누가 팀스피리트에 20여만의 대군이 투입되리라고 상상이나 했던가?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가공할 핵병기들이 실전연습에 투입된다는 사실을 상상이나 해 봤던가? 더구나 공지전(空地戰)이라는 생소한 전술교리에 따른, 북의 심장부에 대한 대규모 공격작전은 방어와 전쟁억지의 상식적 이해에 머무르고 있는 일반에게는 충격 이외에 그 어느 것도 아니었다.

전쟁을 억제한다는 것이 모든 군사연습의 지상목표로 발표되었다. 올해에도 북의 전쟁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팀스피리트」 89를 중단할 수 없다고 하며, 한편 미국은 오는 9월~10월에 걸쳐 북태평양 일대에서 사상최대 규모의 태평양지역 해상작전인 「태평양연습(PACEX)」을 대소 억지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한다고 한다.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기에 이들 훈련은 방어적인 것이며 북방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훈련을 강행해야 한다는 것이 한미 양국 당국자들의 일치된 주장이다.

반전(反戰) 평화의 세론이 정착되지 못한 한국인에게 전쟁억지의 이념과 논리는 신성불가침의 가치로 인식돼 왔다. 그것은 올해의 경우처럼 일개 군사연습을 위해 민족적 숙원인 통일협상을 포기하는 사

태까지도 허용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떠올렸던 몇가지 의문이 신성불가침에 대한 도전을 놓고있는 것도 현실이다. 유례없이 「팀스피리트」 문제가 여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것도 이런 의문의 확산 때문일 것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팀스피리트」와 「태평양연습」의 실상을 분석함으로써 전쟁억지론의 본질을 규명해 보겠다. 이 분석에는 억지론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핵억지전략에 대한 이해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반전 평화를 기치로 내건 국제적 세론이 어떻게 한반도에 적용될 수 있는가를 해명함으로써 전쟁억지론의 폐지와 새로운 안보관의 정립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2. 「팀스피리트」와 전쟁억지

70년대 박정희정권의 반공선전이 극에 달해 있던 시기에 우리는 '초전박살'의 구호를 귀가 따갑도록 들었다. 북한이 남침을 감행할 경우 개전 초기에 섬멸작전을 펼쳐 북한군을 박살낸다는 것이다. 이것이 소위 전방방위전략이다. 여기에는 각종의 대량살상무기가 동원되어야 한다.

「팀스피리트」 한미합동 군사연습은 76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런데 초기 훈련은 이전의 군사훈련들(「프리덤 볼트」, 「포커스 레티나」 등)처럼 미국의 대한 안보공약을 재확인하는 의미에 중점을 뒀던 것이 사실이다. 훈련은 유사시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증원미군을 투입하는 장거리수송작전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던 것이 78년부터 처음으로 '초전박살'의 원리가 훈련에 본격 도입되었다. 우선 랜스 핵미사일을 들여와 개성공격작전을 벌인 사실이 알려져 세상을 놀라게 했다. 공중에서는 '하늘의 요새' B-52 전략폭격기가 각종의 핵·비핵 폭격기들과 함께 무차별적인 폭격작전을 전개하였다. 가뜩이나 판문점사건으로 정세가 긴박해 있던 상황에서

이들 가공할 공격작전이 전개됨으로써 반도 전체가 일촉즉발의 긴장상황으로 빠져들게 된 것이다.

전쟁을 '억지'하기 위함이라는 이들 군사행동의 본질을 보다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83년 이후의 「팀 스피리트」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83년을 기점으로 유명한 공지전독트린이 한반도에 적용되기 시작했고 그것이 전쟁억지론의 실체를 극명하게 드러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공지전독트린은 한마디로 유사시 전선과 동시에 적의 후방지역(중심지역)을 공격한다는 것이다. 82년 미육군의 전술교범으로 채택돼, 이후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일차된 전술원칙으로 정착돼 있다. 이 독트린을 한반도에 적용하면 전선은 군사분계선을 의미하고 중심지역은 개성-평양-압록강과 두만강의 접점지역에 이른다.

중심공격의 목표는 북한의 후방부대(원산-곡산-사리원 이북)를 공격·섬멸 내지 혼란시켜 후방부대(동으로부터 제1, 제5, 제2, 제4군단)를 고립시키고 전방지원을 차단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F-16비행대, F-4팬텀 비행대 등이 폭격작전을 위해, F-15비행대와 제7함대의 함재기들이 폭격기들의 엄호를 위해, 필리핀 클라크기지에 있는 F-4G 편대가 북측 방공망의 눈인 레이더기지의 파괴를 위해 각각 동원되는 등 미 태평양공군이 주력으로 활동한다. 이들 전투기들은 하나같이 미공군이 자랑하는 최선예의 고성능 전투기로 「팀 스피리트」에서 대규모 공격 편대를 형성해 작전내용을 연습하고 있다.

85년 초 미국이 서독, 이태리와 함께 의정부에 약 300개의 핵배낭을 배치한 것도 중심공격작전을 위한 것이다. 중심공격작전에는 핵배낭을 짊어진 특수부대를 '적' 후방에 침투시켜 북한의 주요시설(특히 군사지휘중추부)을 파괴하는 작전이 포함돼 있다. 85년부터 이 훈련이 실시됐는데, 특히 88년에는 미군측에서 그린베레, 시일그룹을 포함한 육·해군의 9개 특수전부대와 공군의 특수전비행대가 참가해 한국측의 7개 특수부대와 함께 대규모 특수훈련을 실시했다. 일반에게는 서울올림픽에 대한 북한의 테러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공표되었으나 「산케이신문」 88년 9월16일자 보도에 의하면

“상륙작전의 지원임무에 덧붙여 새롭게 '적'의 후방을 교란하고 통상전부대의 진격에 협력해 선제공격에 맞춘 독자적인 작전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고 한다.

중심공격작전에 호응해 휴전선에서는 일대 공격작전이 진행된다. 여기에는 미군측에서 주한미2사단과 함께 미본토에서 제25보병사단, 제9보병사단, 제7보병사단이 참가하여 해·공군과의 연합작전을 펼친다. 작전내용에는 적진지에 대한 폭격작전, 도하작전, 산악전훈련 등이 있으며, 전투지역 상공의 관제활동은 오산기지에 있는 OV-10 관제기가 담당한다. 특히 폭격작전에 동원되는 B-52 전략폭격기, F-111 중폭격기, 155밀리 곡사포 등이 모두 핵공격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팀 스피리트」에서 실시되는 야외연습의 하이라이트가 상륙작전이다. 여기에는 한미 양국의 함대, 해병대, 항공기동이 투입되는데, 그 시나리오에는 대개 가상적 해안에서 적이 부설해 놓은 기뢰를 제거하는 한편, 항만 봉쇄를 위한 기뢰부설작전을 수행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아축 해군은 특수부대를 수중 침투시켜 적 해안기지에 대한 파괴공작을 진행함과 동시에 적 함정을 공격, 격멸한다. 그 직후 하늘과 바다로부터 본격적인 상륙작전을 감행한다는 것이 훈련의 골자이다.

여기서 우리는 두가지 의문에 직면한다. 먼저 억지(抑止)는 방위력에 의해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공격력에 의해 가능한 것인가? 다음으로는 실사 억지가 공격력에 의해 가능하다고 가정하더라도 「팀 스피리트」에 투입되는 공격력은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 아닌가?

상륙지원을 위해 투입되는 함정들에는 미 7함대의 주력이 망라돼 있다. 7함대의 기함(旗艦)인 블주) 미해군의 특수부대

루리지호(상륙지휘함)를 비롯, 1~2척의 항공모함과 기동부대에 배속된 순양함, 구축함들이 대거 투입된다. 또 상륙작전에는 오키나와의 미 제3해병상륙부대와 제1해병항공단이 주축이며 여기에 한국의 해병대와 양국 특수부대도 동원된다. 상륙지원을 위한 폭격작전에는 A-4, A-6, F-4 등의 함재기와 함께 감도에서 투입된 B-52G 형 전략폭격기도 투입되고 있다. 상륙작전을 완수한 상륙부대는 즉시 내륙으로의 진공작전을 전개한다.

이상이 소위 전쟁억지를 위한 「팀 스피리트」에서 펼쳐지는 야외연습의 주요 훈련내용이다. 70년대의 '초전박살' 사상이 '선제격멸'로 발전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관례에 따라 모든 작전은 북의 남침이라는 가상적 상황을 전제로 전개된다. 그리고 한미 양국은 이같은 위협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전쟁을 억지할 수 있으며, 나아가 실제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우리는 두가지 의문에 직면한다. 먼저 억지(抑止)는 방위력에 의해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공격력에 의해 가능한 것인가? 다음으로는 실사 억지가 공격력에 의해 가능하다고 가정하더라도 「팀 스피리트」에 투입되는 공격력은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 아닌가?

전자의 의문에 대해서는 이 글의 결론에서 답하겠거니와, 후자의 문제는 최근 광범하게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기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자. 논란의 초점은 「팀 스피리트」가 대북 억지력 차원을 넘어 대소 억지력의 차원에까지 확대됐다는 데 있다.

B-52 전략폭격기는 분명히 미소간의 전면전쟁 시 소련의 주요시설을 공습하기 위해 감도에 전진배치돼 있는 무기에 속한다. 또 군산에 배치된 F-16 전투폭격기는 소련의 극동 군사기지를 공격할 항속거리능력을 갖추고 있다. 7함대에서 투입되는 항공모함기동부대는 소련 극동지역을 공격하는 주력으로 편성돼 있는 실정이다.

「팀 스피리트」가 한미 양국이 주장하는 대북 억지력만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상의 지적에서 충분히 밝혀진 것으로 생각된다. 게다가 87년, 88년 연속으로 「팀 스피리트」 기간중 미국의 핵전쟁 지휘기인 F

-4B가 일본 요코다기지에 출현함으로써 이같은 결론을 스스로 증명해 보인 바 있다.

3. 「태평양연습」과 대소 억지

「태평양연습」은 미국이 “태평양 억지에 있어서 극히 적절한 시나리오”를 연습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올해 9월1일부터 2개월간에 걸쳐 행해지는 이 연습은 알류산열도로부터 태평양 오호츠크해, 동해, 남지나해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미 태평양군은 이미 연습에 대비해 작년 호놀룰루에서 대규모 도상연습(PX)를 실시한 바 있으며, 미국의 태평양전략 및 그 능력이 처음으로 실지(實地)에서 검증되게 된다.

지휘관은 미 태평양군 사령관 하데스티대장인데, 태평양군 사령관이 평시 연습의 지휘를 맡은 예는 지금까지 없었다고 한다. 이미 86년 1월부터 알류산열도, 베링해로 작전의 중점을 옮기고 있는 제3함대와 일본의 요코스카를 모함으로 서태평양에서 인도양까지를 담당하고 있는 제7함대의 4개 항공모함 기동부대, 육군 2~3개사단, 해병대 1개사단, B-52 전략폭격기를 포함한 항공기 500기 이상이 투입된다고 하며, 특히 일본, 필리핀, 한국, 마리아나에 주둔중인 미군도 동원되는 공전(空前)의 규모이다. 게다가 미국은 태평양지역의 모든 동맹국에게 참가를 요구하여, 그 중 일본, 한국, 필리핀이 수락의사를 표명해 각각의 지역에서 책임을 분담하기로 돼 있다.

이같은 대연습이 국제적 데탕트 기류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실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산케이신문」 89년 1월16일자 보도는 “과거 미군의 움직임 등”에 입각해 볼 때 이 대연습의 시나리오가 “캄차카반도의 무력화, 알류산·치시마열도의 점령, 오호츠크해·동해의 제압, 일본·한국의 방위·반격, 시레인(해상교통로)의 확보 등이 상정되는 것이 확실”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 과거 미군의 움직임을 추적함으로써 미국측의 의도를 반추해 보자. 미군의 움직임이란 최근 태평양지역에서의 군사전략과 군사행동을 의미하며, 특히 「88회계년도 미국방보고」에서 통상전략으

로 공식 채택된 해양전략이 중심적 의의를 갖는다. 왜냐하면 「산케이신문」이 지적한 「태평양연습」의 시나리오가 바로 이 해양전략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88년에 실시된 일련의 군사행동(「팀 스피리트」 88→「림팩」88→올림픽 기간중 미일 공동연습)을 통해 본격적인 실험을 거친 바 있다.

88년 실시된 일련의 훈련을 통해 밝혀진 해양전략의 구체적 전개상을 살펴보면 다음 3단계로 구성돼 있다. 1단계는 미소 대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위기가 발생했을 때, 진전배치부대가 즉시 전투태세에 들어간다. 이와 동시에 대잠수함작전 전력을 소련의 전략미사일 원자력잠수함을 공격할 수 있도록 진전시켜, 소련 함대를 전략미사일 원자력잠수함 방어에 몰아넣어 시레인(해상교통로) 공격에 나서지 못하도록 한다. 2단계는 미소전쟁에 돌입했을 때, 해군이 될수록 깊숙이 전진하여 주도권을 잡아 일거에 공격을 가한다. 일본 자위대 등 동맹국의 전력을 결집시켜 일본의 3해협 등 세계의 중요한 초크포인트(좁은 항로)를 봉쇄하고 전략미사일, 원자력잠수함은 포함한 모든 소련 잠수함에 공격을 가하여 소련 함대와 백파이어기 등의 미사일 발사기를 공격·파괴한다. 3단계는 모든 소련 함대의 파괴를 완료하고 특히 전략미사일 원자력잠수함을 괴멸시켜 핵군형이 미국측에 유리하도록 이끌고 또 해병대는 치시마열도와 사할린 등 소련 영토에 상륙하여 미국이 유리한 상황에서 전쟁을 종결시킨다는 것이다.

이같은 미소간 전면전쟁 시나리오는 83년의 「프리트스」83-1 군사연습 이래 실전연습으로 계속 실행돼 왔다. 86년 완성된 미일간의 시레인 방위연구도 이 시나리오에 입각해 일본 자위대가 방어임무, 미 태평양함대가 공격임무를 담당하는 역할분담을 공식화한 것이다. 사실상 「태평양 연습」은 북태평양에서의 미국의 전면전 연습과 「팀 스피리트」와 같은 국지전연습을 일체화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일체화가 전지구적 규모로 설치된 미국의 대소 억지력 중 일환이라고 부른다. 「태평양연습」의 시나리오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팀 스피리트」와 마찬가지로 공격능력이 전쟁을 억지할 수

있다는 이념이 일관되게 관철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이 시나리오는 최종적으로 소련의 전략 핵전력을 파괴함으로써 핵군형을 위로 이끌어야 한다는 위험천만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소련군 최대의 약점이자 미국 최대의 강점인 해양에서의 전쟁을 통해 이제는 당연한 '억지'가 아니라 '전쟁수행'을, 그것도 핵군형의 차이를 목적으로 하는 전쟁을 수행한다는 계획 앞에 전쟁억지론의 본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4. 억지와 전쟁수행의 위험한 결합

“세계규모의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억지를 보증하는 중요한 요소이다”(J. D. 와트킨스 『해양전략』). 전쟁의 억지라는 사고방식에는 늘 전쟁수행능력의 문제가 결부돼 있다. 가장 안전적이라는 핵병기의 확증적인 보복파괴능력에 기초한 상호억지라 해도 그런 보복핵공격을 정확히 실행할 수 있는 능력 위에 성립되고 있다. 그러나 억지라고 말하면 적어도 상대방의 공격을 받아 대응하는 수동적인 태세라는 인상을 받기 쉽고, 또 그런 인상이 일정한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었다고도 생각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카터정권 말기 이래, 그리고 레이전정권으로 되면서부터는 특히 현저하게 「억지」를 전쟁수행능력의 강화, 강조에서 찾는 정책, 「수행」 즉 「억지」 전략이 전면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레이전정권의 전략핵전력 근대화계획이 그 일례이다. 이는 개개의 병기의 근대화, C·I(지휘·관제·통신·정보) 시스템의 갱신·비취약화라는 장비의 근대화계획이 아니다. 대략 수개월 이상 계속될 미본토를 포함한 지구규모의 핵전쟁에 견디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결국은 승리할 수 있는) 전략과 태세를 구축하려는 계획이다. 그 안목은 소련과의 핵전쟁에서 생각되는 모든 양태의 핵교전에서 소련이 기대할 수 있는 '성과'를 상회하는 반격을 가한다는 미국의 핵전쟁 수행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소련을 억지하고, 억지가 파괴된 경우에는 그 능력을 구사하여 항상 우세속에 핵전쟁을 수행하고, 그 어떤 단계에서도 미국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전쟁을 종결짓도록 한다는 데 이르고 있다. 한미 양국의 당사

자들이 한편으로는 긴장완화를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력 증강을 주장하는 것도 전쟁억지론이 '갖는 이같은 성격에서 연유한다. 소위 '힘에 의한 평화'를 말하는 것이며, 그 힘의 주력은 공격능력이다. 방어전력은 상대방에게 공포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억지'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클라우제비치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전쟁론을 가장 충실히 실행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이념은 냉전이 물고온 가장 가공할 유산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팀 스피리트」가 진행될 때마다 남북대화가 중단됨은 물론, 북한에서는 준전시상태 등이 선포되어 한반도에 극도의 긴장상태를 몰고 오곤 했다. 또 이러한 대결정책은 남북한의 극한적인 군비경쟁을 유발, 전쟁의 파괴력을 증폭시켰을 뿐만 아니라, 군비지출의 확대로 경제발전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 속에서 날로 강화되는 남북간의 불신과 반목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상처를 민족에게 안겨 주었다.

여기서 우리는 최근 세계적인 데탕트 추세에 발맞춰 각국의 안보관·국방정책이 새로운 전환을 모색

하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소련과 동구에서는 순방위적 군사독트린이 제창되고 이에따라 일련의 군축조치를 취하고 있다. 서독을 비롯한 서유럽 각국은 82년의 제2회 유엔 군축총회에서 팔머 전스웨덴 수상이 밝힌 '공동의 안전보장'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어느 쪽이나 종래의 '상대방을 위협함으로써 자신의 안보를 유지한다'는 방위정책에서 전환, '상대방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이 자신의 안보를 위해 유익하다'는 사고방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같은 새로운 안보관이 한반도에 도입되는 데는 보다 밀도있는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상호간 공격무기 특히 대량살상무기의 선차적 감축, 공격적 군사전략의 상호 배제, 일정규모 이상의 군사연습 특히 공격적 군사연습의 상호중지 등이 선결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팀 스피리트」의 문제도 이같은 정신에 입각할 때만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미국의 전쟁억지론에 대한 한국측의 자주적 대응이 시급히 요청된다 하겠다.

5. 남북한 전쟁능력 비교연구

이영희

(사회와 사상, 한길사, 1988.9)

1. 이 시론의 목적과 방법

이 논문은 우리 사회에서 지난 30여년간 진지한 이론적 실증적 검토의 노력 없이(또는 허용되지 않은 까닭에) 일반적 믿음처럼 고정관념화되어버린 북한의 전쟁감행(남침전쟁)론을 분석적 실증적 방법으로 그리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려는 목적에서 시도되었다. 그리고 가능하면 어떤 결론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

국가적 이데올로기로 고정관념화되고 마치 사회신념처럼 일반화된 감이 있는 이같은 주제를 다루는 데는 적지않은 어려움이 따른다. 굳이 그 낱말을 열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어떤 결론이 도출되거나 그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이 글은 한 시민 개인으로서 지금까지 없었던 시도인 까닭에 필자 자신의 능력과 지면의 한계를 설정하여 고찰의 범위를 물질적 요소들에 한정하였다. 즉, 문제의 제 1차적 결정요소인 광의의 군사력과 그것을 지탱하는 생산력·경제력의 군사전용 효과, 그리고 전쟁에 개입하는 국제적 작용관계 등이다. 남북의 정치·사상·신념체계……등은 물론 중요한 요소들이지만 남북 민족간의 위기구조가 주로 군사적이라는 기본성격을 고려하여 그렇게 설정한 것이다.

우리 정부(미국정부를 포함)와 군부는 오랫동안, 쌍방 전쟁능력에 관한 상새하고도 구체적인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제공은 하지 않으면서 '전쟁위험·전쟁가능성'을 강조해왔다. 때로는, 북쪽의 군사력에 관한 단편적인 수치를 발표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런 자료들은 대개 정부와 군부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그때그때의 시국의 정세변화에 맞추어진 방향과 내용이었다는 사실이 자주 사후적으로 확인되었다. 또 그것들은 미·소를 비롯한 외국정부·외국연구자들의 자료와 적지않은 갈등을 보였다. (북한의 자료는 일단 이 논문에서는 도외시하였다.) 다시 말해서 객관적 신빙성이 결여되었던 까닭에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비교·분석·평가·판단의 근거로 삼기 어려웠다.

필자는 소위 '직업군인'도 '군사전문가'도 아니다. 다만 6·25전쟁에서의 7년간의 전투부대 장교 경험과, 그후 30년간의 국제관계 연구작업의 일부를 이루는 '군사'문계에 대한 지식 및 정보를 도구로 삼아서 시론적 작업을 시도한 것이다. 작업에 있어서의 필자의 입장은 비판적 분석이다. 한국과 미국의 정부와 군부의 발표나 주장이나 입장을 처음부터 부정하는 입장도 아니다. 그렇다고 목적을 가지고 단편적으로 주어진 '관급(官給)'자료를 토대로 한 결론에 승복하지도 않는다. 오로지 필자가 독자적으로 수집할 수 있었던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그 자료들이 이끄는 방향대로 논리구성을 진행하는 것이다.

필자는 한 시민으로서 정부와 군부의 예정된 결론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결론까지를 포함한 작업을 시도한다는 것이 여러 모로 어려움을 예상케 한다는 사실을 십분 짐작하는 바다. 실제로, 어쩌면 대한민국과 군의 창설 이후 한 개인으로서 이런 작업을 시도하고 발표한(하는) 최초의 사례가 아닐까 생각된다. 그럴수록 대한민국 정부가 대통령 선언(7월 7일의 남북평화를 위한 6개항 선언)을 발표한 역사적 시점에서 의미있는 작업 시도라고 나름대로 의의를 부여하기도 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 시민의 개인적 작업이므로, 필자로서는 소론의 결론이나 부분적 기술이 선부 옳다고 고집할 생각은 없다. 작으나마 학문적 시도이므로 과학성과 논리성의 인도를 받으면서 진실에 '가까운'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써 만족할 것이다. 필

* 이 시론의 내용은 88년 8월 4일 국회 통일정책특별위원회가 주최한 8·15 남북학생회담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표된 바 있다.

4의 이 특은 시도가 계기가 되고 또 토대가 되어서, 다른 이들의 보다 과학적이고 충실한 연구의 결실이 뒤따른다면 이 시도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셈이다.

제한된 원고지 분량 때문에 더 많은 자료와 통계표·수치 및 설명이 생략되거나 제외되었다. 이 할도 아울러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군사력 분석에 있어서는 주한미군과 핵군사력은 제외하였다. 우선은 남·북한으로 구성되는 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민족문제로서 이 이같은 도전에 접근하는 태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 분석과 평가의 준거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대규모의 군사공격, 즉 소단위의 병력이 국소적 공간에서 단시간의 전술적 일회적 공격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총동원령을 선포하고(선전포고의 유효와는 관계없이) 전전선에 걸친 장기간의 전략적 공격작전을 전개할 경우를 상정하면 전쟁이론의 일반적 준거로서 다음의 여섯 가지 요소를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전부'에 대한 확실한 자신이 있어야 한다. 북한이 남침전쟁을 구상하거나 준비하거나 계획한다면 이 여섯 가지의 치밀한 검토에서 모두 남한에 우월하다는 확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①개전(開戰)의 시점에서 현재적으로 보유하는 군사력이 남한의 그것에 비해서 우세해야 한다.

②단기적 속전방식으로 승리를 기대하려면, 공격군은 병력·화력·기동력……등 종합전력이 수비군(이 경우에는 남한)의 그것에 비해서 최저 2배 내지는 3배가 되어야 한다.

③상당한 시간에 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구전 또는 장기전을 계획할 경우에는 전쟁과정에서 군사력으로 전환 투입될 국가의 총자원(민간부문 자원·능력)이 남한의 그것보다 월등 우월해야 한다.

④전쟁 당사자 쌍방과 관련된 현시점에서의, 그리고 가능한 예상할 수 있는 전쟁기간중의 국제적 조건과 환경이 북한에 유리하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⑤승리를 확실한다 하더라도 그 전쟁행위의 결과로 예상되는, 또는 사전 계산된 전쟁피해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전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가치가 우월해야 한다. 즉, 북한이 전쟁을 기도한다면, 그 결과로서 북한이 예상 기대하는 통일의 형태가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까지를 합친 한반도의 전쟁파괴의 피해와 그 장기적 복구건설에 소요될 희생량보다 월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⑥위의 다섯 가지 조건을 무릅쓸 각오와 그 계산 위에서도 전쟁을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전쟁의지'는 ①~⑤에서 우월할 때만 보장되고, 그 반대일 때는 약화된다.

①②③은 합하여 '전쟁수행 능력'(capability)을 구성하며, 전쟁계획의 제 1조건이 된다. ①은 단기전을 위한 조건인바, 월등히 취약한 상대방에 대해서만 효과가 있다. ③은 장기전에 있어서의 절대적 조건이다. 제 2차세계대전에서 독일 파시스트와 일본은 각기 ①과 ②의 조건은 갖추었으나 ③의 조건에서 실패한 가장 좋은 사례이다. 북한이 남침전쟁을 계획한다면 ②와 ③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2~3배의 전력과 국가적 종합능력이 있어야 한다. 방금(7월 18일) 끝난 8년간의 이란-이라크전쟁은 그 당사자 어느 쪽도 ①②③을 전혀 갖추지 못한 채 강행된 무모한 전쟁의 전형적 사례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또한 ①②③의 조건은 텅텅 비어 있는 실정에서 '북진통일' '무력복침'을 낚시로 부르짖은 좋은 예이다.

④의 국제적 조건·환경은 작은 나라의 경우일수록 크게 작용하는 요소이다. 현대전쟁은 국제적 조건의 평가를 도외시하고는 승리를 기대할 수 없다. 강대국조차 그렇다. 미국의 베트남전쟁에서의 실패가 전형적 예이다. 북한의 6·25침공은 ①②③의 조건 위에서 개시되었으나 ④의 역조건 때문에 실패한 약소국 전쟁의 전형이다.

승리의 대가로서의 파괴가 승리로 얻은 목표의 가치보다 크다면 그 전쟁은 할 가치가 없

는 전쟁이다. 역시 북한의 6·25 전쟁은 북한의 지도자들 자신이 그후 확인하고 시인하고 있듯이 목표의 가치보다 파괴의 희생이 더 큰 ⑤의 경우의 좋은 예이다. ①~⑤까지의 계산이 긍정적이라면 ⑥의 전쟁을 하려는 의지는 보장된다. 전쟁승리의 확실성이 입증된 것이다. 반대로 ①~⑤의 조건의 종합이 부정적이라면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그 의지는 부정된다. 이 논문에서 검토하려는 목적은 바로 ①~⑤의 조건들을 분석한 뒤에, 그것이 ⑥을 보장하는 것이나 반대로 부정하는 것이냐의 결론을 도출하려는 것이다. 만약 ①~⑤가 긍정적으로 판명된다면 우리 정부나 군부가 주장하는 대로 북한의 ⑥의 의지는 실천화될 즉 남침전쟁) 가능성은 크다. 반대로 그것이 부정적으로 판명된다면 남침전쟁 기도설은 부정된다. ①~⑤의 부정적 조건종합을 무릅쓰는 '의지'는 광인(狂人)뿐이다.

3. 단기공격작전을 위한 현재의 군사력 비교

“한국 국방부는 한국의 3야당 총재와 야당관계자 약 60명을 초치하여 한국의 안보 정세, 북조선의 실정을 설명하고 비디오투를 보여주었다. 바로 노태우 대통령의 공약에 앞선 것으로서, 한국의 국방당국이 야당에 안보문제와 북조선 실정을 설명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일본 『아사히신문』 6월 16일 기사.)

어떻게 설립된 북한의 군사력은 “1962년부터 87년까지 15년간에 병력은 약 40만에서 약 85만으로 2배 이상 증가하고, 같은 기간에 탱크는 5.4배, 야포는 3.7배, 합정은 3.7배, 항공기는 1.7배 증대했다. 고도로 훈련된 간첩이나 특수부대요원 수는 9만 6천 명에 달했고, 그중에서 해상·공중·터널을 이용해서 남침할 수 있는 병력은 5만 3천 명이 된다”고 한다.

국방부 설명에서 병력은 수치로 명시되어 있으나 주요 전력인 탱크, 야포, 합정, 항공기 등은 수치는 없고 증가된 '비율'만이 제시되고 있다. 수치 없는 비율만의 표시는 판단의 기준으로서 불완전하고 위험하고, 오도되기 쉽다는 사실은 상식에 속한다.

4) 병력의 규모

북의 병력 85만 평가는 미국 CIA의 추산인데, 카터대통령 정부가 주한미군 부분철수를 발표했다가 한국과 일본정부 및 미국군부의 반발로 철수계획을 백지화한 1977~78년의 1년 사이에 북한병력이 갑자기 11만 2천 명이나 증가했다는 발표에 근거하고 있다.” 이 78년은 이란혁명과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계기로 미국정부가 미국과 동맹국의 급격한 군사력 증강을 다그친 해이다. 미국은 카터정부의 '인권정책'에서 '군사대결·증강'으로의 정책전환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구실삼아 소련의 군사력 평가를 그 전례에 비해서 급격히 상향·증대 평가 하였다. 동시에 동맹국가들의 군사력증강에 압력을 가하는 구실로 소련을 비롯한 바르샤바동맹국가들, 베트남, 북한의 군사력을 상향평가했다.

북한의 그 시기의 정치·경제 정책을 토대로 볼 때, 그러한 급격한 정규병력의 증대, 그것도 1년 동안에 11여만의 정규군 증대능력이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한국 정보부의 연구·발표기관인 '내외통신'은 1985년판에서 북한병력을 70만으로 계상하고 있다.²⁾ 그렇다면 1985년에서 87년 사이에 15만 명의 정규군이 또 증대되었다는 말이다. 같은 해의 일본방위청 통계도 '약 70만'으로 되어 있다.³⁾ 카터정부 때인 1977~78년 사이의 1년

1) U.S. CIA World Factbook 1984, pp.126~28. 그리고 IISS, MilBal 84~85, pp.102~03.

2) 『내외통신 종합판』(31), 1985. 1. 1~6. 30, p. 381.

3) 昭和 60년(日本紀元)판, 『防衛요람』, 自衛隊 朝雲新聞社, p. 287.

간에 11만 2천 명을 증강한 후에, 레이건정부 시기인 1985~87년에도 15만, 합계 26만 여의 정규병력을 증강시켰다는 계산이 된다. 가능한 일일까? 국방부의 발표를 그대로 믿을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의 제시가 어렵다.

육군 병력의 차이는 질로써 보완된다. 즉 한국군의 지휘관급 직업장교들과 하사관들은 베트남전쟁에서의 다년간의 실전경험을 갖고 있다. 북한군은 6·25전쟁 당시의 지휘관들 밖에 실전훈련이 없고, 그들은 모두 퇴역하였다. 남한(한국)군은 또 장비·보급·사기·훈련 면에서 북한군보다 우월하다. 이것은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바이다.

한편 북한은 80년대에서도 70년대와 다름없이 그 정규군 병력을 55만선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경제력의 취약성 때문에(그 사실은 우리 정부의 모든 공식 발표에서도 5 대 1로 남한이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대로) 남·북한 정규병력의 감축을 꾸준히 계의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그들이 1979년 이후 착수한 대규모의 10대 건설계획(예: 남포갑문공사)에 공병사단과 보병사단을 투입하고 있다. 북한 군대는 휴전선에 배치된 병력까지도 방어지선 후면의 농토를 개간하여 교대로 내려가 농업생산에 종사하면서 식량의 부분적 자급자족을 하고 있다. 북한은 경제건설사업에 대량의 군병력과 장비를 전용하고 있다. 남한에 비해서 병력가용 인구가 절반밖에 안되는 북한은 군병력을 증대할 여지가 없다. 북한이 모든 한반도문제의 해결방안에서 군사력(병력) 감축을 제외하는 하나의 결박한 이유이다. 그와 같은 군무 이외의 작업에 시간과 체력을 소모해야 하는 북한 병력과 완전보급으로 유지되는 남한군대의 전투능력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총인구의 병력충원 능력에서도 남북은 2 대 1로 남한이 우월하다.

2) 탱크, 야포, 합정, 항공기 등의 전력

전쟁의 주요·기본무기인 이들에 관해서는 실수(實數)를 비교할 수 있을 만한, 우리 국방부 당국에 의해 일관되게 공개된 자료가 없다. 외국 정부 또는 저명한 권위 있는 군사연구소들의 연구조사 결과들과 견주어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같은 긴장상태로 군사적 대치를 계속하고 있는 서유럽의 북대서양동맹과 동유럽의 바르샤바동맹은 서로 이같은 기본무기의 수치를 공개하고 있다. 이웃 일본도 그 군대(자위대)연감은 해마다 자기 군대의 기본무기의 실세는 물론, 증강계획의 전모를 소상히 밝히고 있다. 비밀주의가 지배하는 한, 우리 정부(군부)에 의해서 단편적으로 발표되는 수치를 토대로 한 남북의 전력비교나 주장은 신빙성을 획득하기 어렵다. 그것은 전제를 놓고 먼저 미국정부의 공식문헌에서 찾아 보면 다음과 같다.(83년 현재).

표 1 한반도의 재래식 전력 비교⁴⁾

	탱크	병력수송 장갑차	야포	대공포	군용기
남한	1,000	840	7,400	300	380
북한	2,675	1,140	19,100	8,000	682

북한의 수치는 끝자리 수까지 제시하면서 남한의 수치를 개략적 수치로 제시한 것부터 통계자료로서는 신빙성을 의심케 하기에 족하다. 미국 국방부의 '대의회보고서' 작성 정책 변경 탓인지, 1988년 대의회보고서에는 남·북한 병력·무기 비교가 없어서 정확한 비교가 불가능하다.⁵⁾

4) 1983년 미국 국방부장관의 대의회보고서에서, 『중앙일보』 1983년 2월 3일자 제 2면 보도.

5) Annual Report to the Congress, Fiscal year 1988, Casper Weinberger, Secretary of Defense, Part 1 Defense Policy, p.32. 이 장의 b. East Asian Balance (東北亞의 군사력 비교)의 Korea 파트에서는 다만 이렇게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

“남·북한의 지역적 군사력 균형은 미국의 지극히 중요한(critical) 이해적 관심사이다. ……북한은 그 형편없는 경제에 파멸적인 결과를 돌보지 않으면서 그 강대한 군사력의 현대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국방부가 표시한 비율을 다시 중앙정보부(안기부) '내외통신'의 해설 속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⁶⁾

표 2 남·북한의 군사력 대비

	병력(명)	탱크(대)	합정(척)	군용기(대)	야포(문)
남한	1	1	1	1	-
북한	1.2 (70만)	2.5 (3,200대)	3.4 (551척)	3 (740대)	- (4,800문)

이 비교는 남·북의 비율과 그 기초로서 북한측만의 수치(추정)를 제시하고 있다. 북한의 수치를 토대로 그 비율로 역산하면 남한의 수치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수치로서 다음과 같이 된다(85년 현재).

표 3

	병력(명)	탱크(대)	합정(척)	군용기(대)	야포(문)
남한	583,000	1,280	162	247	-
북한	700,000	3,200	551	740	4,800

85년의 남한 군용기 수가, 83년의 군용기 수(표 1)보다도 적다는 것(380대 → 247대)은, 바로 공식발표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단적인 실례이다. 이 사실을 도외시하고 주어진 대로의 수치를 비교한다면 대체로 1985년 현재로 북한의 군사력은 그 주요 무기에서 수적으로는 남한보다 우월하다. 그 차이는 북한의 대남공격을 가할 경우, 공격군은 수비군에 대해서 3배의 군사력이 필요하다는 군사적 상식의 비율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그래도 상당한 우세인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보았듯이 이 수치의 차이는, 카터정부의 군사증강정책으로의 전환시(1977~78)와 레이건 대통령이 대선연 군사공격전략으로 미국 자신과 동맹국들의 무제한 무력증강을 추진한 1983년 이후의 두 차례에 걸쳐 설득력 있는 근거의 제시 없이 소련과 그 공산주의 동맹국들의 군사력을 대폭 상향평가한 결과인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경우는 카터의 주한미군 감축 결정을 백지화하면서, 그 전해에 비해 병력 16~26만(특공대 10만이라는 수를 포함), 탱크 650대, 병력수송용 장갑차 250대, 야포 5천~1만 문, 대공포 2,500~3,500문……을 상향수정 발표했다.⁷⁾ 단번에 약 30~50퍼센트의 상향수정평가이다.

탱크의 경우 미국의 권위 있는 무기연감은 이미 1984년 현재, 남한(한국)이 M-48 패튼(PATTON) II형 640대, M-47형 920대, M-3A1형 및 M-5A1형 80대, M-4 셔만(SHERMAN)형 210대, 합계 1,850대를 보유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⁸⁾ 이것은 이미 1984년 현재로 85년 현재의(표 3) 수치인 1,280대보다 570대나 많은 수이다.

남한은 미국의 제네럴 다이내믹스 회사의 라이선스와 국내설계에 의한 최초의 국산탱크(XK-1 또는 '대한민국 자체생산 탱크' ROKIT라고 불리는 것)의 양산체제를 가동중이다.

……대한민국도 미국의 지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북한의 4배나 되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형을 이루기 위한 군사력 현대화를 추진해왔다. 남·북한의 이 경제적 대조는 남한 군사력의 장기적 대북 위치를 유리하게 만들고 있다.

6) 앞의 『내외통신 종합판』, pp. 381~82.

7) Stephen D. Goose, "The Militar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Korea Scope*, 1985, p. 16.

8) Arsenal of Democracy-III. AMERICA'S WAR MACHINE, Tom Gervasi, 1985, pp. 274~75.

이로써 한국은 M-16소총에서부터 탱크, 전투기, 군함까지의 육해공군의 기본무기류의 전면적 국산단계에 있다. 북한은 전투기와 구축함급을 제외한 기본무기의 국내생산체제를 갖춘 것으로 보도되었다.

병력수송용 장갑차(APC)는 83년 미국 국방장관 대의회보고서에서 남한 840대, 북한 1,140대로 되어 있다(표 1). 그러나 앞서의 공개적 무기연감에는 M-113A1형 및 M-577A1형 장갑차 2,400대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공식발표된 수치와 너무나 큰 차이를 말해준다. 또, 미국 육군과 해병대의 표준형(12.2톤)이며, 동맹국 44개국에 공급 판매된 다량의 장갑차 가운데 한국은 서독의 3,350대에 이어 2,400대로서 제 2위의 다수보유국으로 열거되어 있다.⁹⁾

미국의 레이건정부 등장 후, 한국군사력의 대폭적이고 급속한 증강은 GNP가 4~5대 1인 북한으로서는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무기생산의 증대 이외에도 주로 미국제 선진무기에 주력한 결과 한국군의 무기는 노후한 북한군 무기를 질적으로 훨씬 능가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한 군사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남한은 이미 1983년, 제 3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하는 20개 상위국가군 속에서 제 8위에 속하는데, 북한은 20위 서열 속에 들어 있지도 않다.¹⁰⁾ 미국정부도 1972~82년간의 남·북한 무기수입비를 남 37억 달러 대 북 16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남한이 북한에 비해 2.3배나 더 많은 무기를 구입하고 있다.¹¹⁾

남·북한간의 전쟁은 탱크전의 성격을 띠게 된다. 그러나 6·25의 경험에 따라서 탱크 방어태세는 남북이 사실상 거의 완벽하게 구축하고 있다. 반전차장벽이 여러 겹으로 도로를 차단하고 지뢰대, 합정, 반탱크포(지상과 공군)의 성능이 우수하다. 탱크의 대치통로인 하천은 휴전선을 따라서 댐을 구축하여 모두 물로 잠겨버렸다. 이같은 입체적 반탱크태세는 남북 어느 쪽도 탱크전을 구상할 수 없게 만들었다. 6·25의 반복은 있을 수 없다. 탱크의 이동은 첩보인공위성을 비롯한 각종 탐지장치로 빠짐없이 포착된다. 탱크의 대수가 몇이나 하는 것은 가상적인 한반도 전쟁에서 큰 요소가 되기 어렵다.

3) 공군기

북한의 전투용 각종 기 합계 740대는 전폭기 480, 요격기 260대로 구성된다. 이 740대의 거의 40퍼센트(즉 절반 가까운 수)는 MIG-15형과 MIG-17형으로서 한국전쟁(1950~53) 당시의 기종이다. 정확하게는 MIG-15는 1949년형이고 MIG-17은 1953년형이다. 두 형 모두 음속 이하 속도이며 야간전투도 못하고 전천후용도 아니다. 레이더와 조준장치도 원시적이다. 이 사실은 한국정부 당국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¹²⁾

MIG-19형은 한국전 휴전후인 1955년부터 제공되었다. 그러나 성능에 있어 MIG-15, 17보다 나은 것이 없는 원시적인 것이어서 소련 자신이 50년대말에 생산중단한 것이다.

740대 가운데 그것들보다 우수한 초음속 기종으로서 1980년대에 들어서 도입된 MIG-21형은 160대, 86년부터 소련이 제공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MIG-23형의 수는, 미국의 정보기관이 단편적으로 발표한 것을 종합하면 30대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두 형은 모두 방어용 요격기이며 대지공격용이 아니다.

남한공군의 F-4, F-5, F-16에 대항할 수 있는 소련공군의 전폭기·요격기는 MIG-25, 27, 29 등인데, 소련은 아직 MIG-25 이후의 최신형을 북한에 공급했다는 정보가 없다.

9) 주 8의 연감, p. 277.

10)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Year Book*, Stockholm, 1983, p. 270.

11) The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gency(ACDA), WMEAT 1972~82, p. 75.

12) 앞의 『내외통신 종합판』의 '군사'부 자체가 남·북한의 각종 무기 전력비교에서 침략전쟁의 가능성과 위험을 강조한 끝 결론부에서 다음과 같이 맺고 있다.

"북괴가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병기들이 구식 병기여서 수명이 다해가고 있으며 병기부속품의 부족과 함께 병기운영에 필요로 하는 막대한 경비조

MIG-27은 2년전 인도에 판매했을 뿐이다. MIG-29는 소련공군만이 보유하고 있다.

한편 공개된 무기연감과 다른 자료들에 의하면 이미 1984년 현재 헬리콥터와 수송기를 제외하고서도 남한의 군용기는 590대(F-5 250대, F-5E·F-5F(국내 공동생산) 66대, F-4D·F-4E 76대, F-86F 70대, CV-1000 24대, A-37 30대, RF-5A 10대, S-2A 20대, O-2A 14대, T-33A 30대)에 이르렀으며, 90대의 F-16(Falcon)이 구매계약된 것으로 알려졌다.¹³⁾ 그후 남한은 F-5기종의 국내생산과 기타 기종의 수입으로 수에서도 북한과 맞먹을 뿐 아니라, 그 성능은 월등 우월하다.

그밖의 소수의 수송기, 정찰기, 대전차 공격기, 대잠수함 공격기, 관측기 등에 관해서는 지면상 생략한다.

4) 헬리콥터

현대전의 총아인 각종 헬리콥터의 정확한 상황과 수는 남·북 모두 확인할 수 없다. 다만 헬리콥터에 있어서는 한국은 북한에 비해 성능으로나 종류로나 그 수에서나 훨씬 우월한 것으로 추산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북한은 85년 이후 한국군이 사용하는 주력무기의 하나인 미국 휴즈 M-500형(OH-6 SAYUSE) 87대를 유럽에서 '밀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부는 북한이 이것으로써 남한에 대한 야간 후방기습 특공대용으로 사용하려 한다고 비난하고 국민에게 후방 야간 특공대 기습작전의 위험을 경고하였다.¹⁴⁾

그런데 휴즈 M-500형 헬리콥터의 성능은 시속 175마일, 항속거리 380마일, 적재중량 2천 파운드로서, 군인은 보통 4명을 태운다. 7명이 한계이다. 북한이 '밀매입'했다는 87대 전체를 남김 없이 특공대 야간기습 목적으로 무장특공대 5명씩을 태워서 투입해도 최대 435명을 수송할 정도이다. 게다가 소리가 크고 속도가 느려서 탐지와 요격의 좋은 표적이 된다. 한국은 1985년에 미국 휴즈회사와 라이센스 합작형식으로 국내 생산체제에 들어가 85년에 이미 100대를 생산하고, 그후 계속 생산중이라고 한다.¹⁵⁾

5) 공군력의 종합비교

결론적으로 말하면, 남한은 공군기의 수에 있어서도 대동할 뿐 아니라 그 성능이 월등 우월하다. 게다가 전폭기, 헬리콥터 등 공군 기종의 자체 생산체제가 가동중이기 때문에, 종합적 공군 능력에서 북한보다 훨씬 우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 공군 조종사의 훈련시간은 북한조종사의 훈련시간보다 3배 가량 길다. 이것은 실전에서의 우월에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전쟁에서 미국제 공군기는 소련제 공군기에 67:1로 우세했다.

지금보다 10여 년 이상을 앞선 시점, 즉 겉으로는 미국이나 한국 정부가 공군력의 열세를 대대적으로 광고하던 1974년 단계에서 미국 공군대장 조지 브라운은 "북한공군은 기

달이 어렵다는 문제이다.현재 북괴가 보유하고 있는 무기체제가 대부분 구식무기여서 현대전에 대비한 무기로서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군장비를 현대화하기 위한 대소 집근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p. 378)

13) 주 8의 연감 및 주 7의 Stephen D. Goose의 논문 참조.

남·북한 공군기 수치는 국내에서도 이미 「말」지 11호(민주언론운동협의회, 1987년 5월, pp. 49~52)에 보도된 바 있다.

F-4는 전기 미국 「무기연감」에 따르면, "지금까지 탄생한 비행기 중에서 가장 다목적적이고 빠르고 막강한 전투기일 뿐 아니라, 세계에서 작전배치되어 있는 어떤 최신세대의 전투기들에 비하여 어떤 성능면에서도 우수한 전투기"이다.

14) 앞의 「내외통신 종합판」, p. 379.

15) 앞의 「무기연감」, p. 227 및 텍사스대학 출판부, American Arms Supermarket, 1984, pp. 166.

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방위지향적이지 공격목적 체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¹⁶⁾ 같은 시점에서 당시의 미국 국방장관(슐레진저)은 한국공군력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군사력 강화 5개년계획으로, 특히 공군에게 많은 F-5E 제트전투기를 포함한 15억 달러의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남한은 미국의 지상지원군이 없더라도 북한의 공격을 격퇴할만한 충분한 병력·화력·방위진지 체제를 갖추고 있다."¹⁶⁾

6) 해군력

남·북한의 해군력에 관해서도 우리 정부의 단편적 발표와 내용은 예에 따라서 외국의 평가계통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한국의 함정 및 기타 관계 무장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는 일체 공표하지 않고 있다).

일본군 정보평가에 따르면 주요 함정 분류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수적으로는 일견 북쪽이 우세한 것을 알 수 있다(미국측 자료에 의거한 것 같다).¹⁷⁾

표 4

	척 수	톤 수	잠수함	구축함	호위함	초계정
북한	약 500척	68,000	19척	—	2	34
남한	약 140척	99,000	—	1	8	9

한국측 자료¹⁸⁾에는 북한의 잠수함이 21척, 총척수는 537척으로 되어 있다. 세계의 권위 있는 군함연감(JANE)이나 세계전략연구소의 수치도 대동소이하다.

해군력은 함정의 크기에 대체로 비례한다. 대형은 공격용이고 소형일수록 방어용이다. 우선 총척수와 총톤수의 관계에서 남쪽의 함정은 평균 707톤이며 북한은 척당 평균 136톤임을 알 수 있다. 즉, 남한 해군력은 북한 함정에 비해 평균 5.2배의 대형함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형함정은 소형함정에 비해서 그만큼 화력과 작전범위가 크다. 다시 말해서 북한 해군력은 표 4에서 분명하듯이 단거리 연안작전을 목적으로 하는 요격용 미사일, 어뢰 발사용 소형(경량급) 함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전체 함정 척수 중 400척이 이에 속하는데 반해서 남한은 그에 해당하는 것이 35척뿐이다. 이 차이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로, 말하자면 남한 해군은 권투에서 '강펀치'용이고 북한 해군은 잇판 '잽'용이다. 또는 남한 해군은 정규 규모의 전쟁용 규격과 편성이고 북한 해군은 상대방의 우월한 공격력에 대한 게릴라전법의 요격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란 호르므즈해협에서 미국 해군 함정에 대한 이란 해군의 요격목적 미사일, 어뢰공격 작전이 그 전형적 방식과 목적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북한 해군은 적에 대한 '히트 앤드 런'용이다. 상대방 해안선과 함정·상선을 교란하거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간첩침투용에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남한 해군의 화력과 항속거리에서 우월한 구축함대처럼 정면공격의 위력을 발휘할 수는 없다. 한국은 구축함의 자체생산으로 그 전력이 증대하고 있다.

다만 잠수함에 있어서는, 남한은 1983년에 176톤급으로 알려진 비교적 소형의 것을 시험적으로 자체 건조하였다. 이것은 지상에도 공개된 바 있다. 그후 어느 정도 크기의 잠수함이 몇 척이나 건조됐는지는 어느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 북한의 잠수함은 남한에 비해서 우세하다.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 1940~50년대, 60년대에 건조된 소련 및 중국의 '불하름'이라 할 수 있다. 1970년대에 독자적으로 건조된 것이 12척 있으나 소형으로서,

16) The Defense Monitor, Center for Defense Information, 워싱턴, 1974년 10월호, 「미국대의 정책의 군사화」, p. 7.

17) 앞의 「일본방위요람」, 1985, p. 287.

18) 앞의 「내외통신 종합판」, p. 376.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 실베스타 콜리 제독은,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것들은 거의 즉시
에 '바닷속의 관'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을 피력한 바 있다.¹⁹⁾

남·북한의 어느 쪽이 전면·선제공격을 시도하거나, 전쟁발생 후에 상대방 영토에 대한
점령을 위한 상륙작전을 가상할 경우에는 상륙정(차량, 탱크, 병력용 등)의 태세가 중요시
된다. 지상과 해상으로부터의 협동적 양면공격작전의 주요수단이 된다. 우리 정부의 견해
는 북한해군이 "300여 척의 고속상륙정을 주력으로……동서해안에서 각종 군사작전을 수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경계한다.²⁰⁾ 외부의 평가는 우리 정부의 주
장인 '300여 척의 고속상륙정'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서의 구스 논문은 113척을
제시하였다. "숫자로 보면 이것은 상당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탱크나 그에 버금가는 중량
급 장비를 수송할 수 있는 크기의 것은 몇 척에 불과하다. 그중에서 제일 큰 것은 4척의
'한태'형이라고 부르는 상륙정인데, 1980년부터 자체건조에 들어간 것으로서 중형(中型)
탱크 3~4대의 적재능력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상륙정으로는 길이 28미터의 '남포'형 선박이 약 100척 있고, 각기 19명의 무장군인을
수송할 수 있다고 한다. 이상의 상륙정들은 적의 해안에 대한 은밀한 소수병력의 기습적
상륙작전, 해상수송 고관 등 목적에 사용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한국은 평균적 함정의 크기와 화력 및 행동반경에서 훨씬 우세하다. 특히
한국의 함정 건조능력은 세계 제 2위의 조선(造船)산업이 1980년대부터 600톤급의 호위
함과, 5인치포를 장치한 '울산'형으로 불리는 HDP 1000 구축함(배수톤수 1,400톤)을 계
속 건조하고 있으므로 척수의 비교로 제시되는 위협은 성능으로 상쇄하기에 충분한 것으
로 평가된다.

남·북한 해군력의 전쟁능력 비교평가에서 한반도의 지리형태적 특성 때문에 특별히 중
요한 요소가 있다. 정부(안기부)의 평가와 견해를 대표하는 앞서의 내외통신의 '북괴군사
력 해설'은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우월 유리한 체제'처럼 설명하고 있다. "북괴 해군은……
동서해에서 개별적으로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지휘체제를 확보하고 있다."²¹⁾

그러나 군사적 해군작전 체제에서뿐 아니라 민간 해운산업에서조차 북한이 "동서해에
개별적……지휘체제를 확보"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강점이나 우월성, 다시 말해서 남한에
대해서 그만큼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만큼 북한의 약점이 되는 것이다. 남한
은 동서해가 남해를 경유하여 해로(海路)로 연결되어 있다. 해군작전에서는 물론이지만 민
간 해운에서도 이 지리적 조건은 동해·남해·서해의 항로·항만·선박·함정의 활용·운영이
일체화된 체제하에서 유기적으로 가동된다.

이와는 반대로 북한 해군은 남한의 남해와 대한해협의 봉쇄로 차단되어 있다. 즉, 동해
의 원산, 청진, 나진 등 기지의 해군력은 서해의 해주, 남포 등 기지의 해군력과 분리 차단
되어 상호 고립되어 있어, 일체화된 유기적 행동체제하에서 작전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북한 해군은 그 도면상의 총체적 종합적 수(數)적 능력이 어쨌든 2분의 1의 기능밖에 발
휘할 수가 없다. 이것은 북한 해군에게는 한반도의 지리 및 휴전선으로 인한 운명적 조건
으로서 극복할 방법이 없다. 북한해군이 남한해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다.

그렇기 때문에 동서해안에서 "개별적으로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지휘체제를 확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치 북한의 우월한 '작전체제'처럼 국민에게 제시하려는 것은 해군의
특성과 작전의 초보적 상식도 없는 해석이다. 이 지리적 조건 때문에 해군력에 있어서 남
한은 북한과 정확히 대등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작전에서는 언제나 2배의 우위를 누릴
수 있다.

19) Stephen D. Goose, 앞의 논문, p. 15.

20) 앞의 「내외통신 종합판」, p. 376.

21) 「내외통신 종합판」, p. 376.

4. 남·북의 군사비

한·미양국 정부와 군부는 북한의 '남침위협'의 근거로서 남·북한 군사비의 대GNP 비
율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있다. 보통 구비율은 북쪽이 20퍼센트, 남쪽이 6퍼센트인 것으
로 발표되고 주장되어왔다. 그러나 GNP 대 군사비 비율의 수치는 '남침위협'의 충분한 증
명근거는 되지 못한다. 정부의 주장대로 남한과 북한의 GNP 대비가 5.5 대 1이라고 가
정할 때, $5.5 \times 6 \text{퍼센트} = 33 \text{대 } 1 \times 20 \text{퍼센트} = 20$, 즉 남·북한 군사비의 실액은 33 : 20 으
로서, 남한이 북한에 비해 1.5배에 가깝다. 비율의 요술에 가려진 진실이다.

미·소 양국간에서 으레 그렇듯이, 특히 미국정부가 군사비 소요액을 국회에 요청할 때
소련의 군사비 비율을 상향평가하고 미국의 그것을 하향평가함으로써, 즉 '소련군사력의
우위위협'을 강조하는 방식은 널리 알려진 바다. 이같은 산출방식을 가리켜 "적 최대전력·
아방 최대전력" 평가방식이라고 한다. 이 비교방식으로 '군사력 우위'나 '침공위협'의 근거
를 제시하는 것은 과학성을 결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유해한 것이며, 그 의도를 의심케 할
수도 있다. 미국이 소련 군사비를 과다평가하는 산출근거는, 미국 군인(각 계급) 1인당 유
지비와 각종 무기생산비를 그대로 소련의 병력과 무기총량에 산술적으로 적용한 결과이
다. 마찬가지로 남한의 비용기준을 북한의 그것에 산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 결과 북
한의 군사비는 자동적으로 고평가된다. 남한군의 인건비는 북한군의 2.25~4.11배이
다.²²⁾ 즉 북한군의 병력유지비가 2.25~4.11배나 과다평가되고 있다는 말이다.

미국정부 관리들은 여러 해 동안 북한이 GNP의 20퍼센트 또는 그 이상을 쓰고 있다
고 주장해왔다. 1984년 초에는 심지어 26퍼센트라고 주장한 군인도 있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군비관리 및 군축담당국'(US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gency=ACDA)
이 발간한 문헌들은 그와는 다른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비율은 1970년대 초반에
는 20퍼센트를 오르내렸고, 1975~79년간은 11퍼센트를 오르내렸으며, 1979년도에는
가장 낮은 9.4퍼센트까지 내렸다. ACDA는 1980년도 평가를 처음에는 8.2퍼센트로 했
다가 18.9퍼센트로 상향조정하였고 레이건정권이 군비경쟁정책을 개시한 82년에는 북한
군사비 비율을 갑자기 21.6퍼센트까지 올려잡았다.²³⁾

1982년은 레이건 대통령이 군사력증강, 대소 및 대공산권 군사대결정책을 강화하면서,
국회에 대해 '소련군사력 우위'론을 가지고 군사예산 증대를 요구하는 동시에, 동맹국가들
에게 각기의 가상의 군사력을 상향평가하면서 군사력 강화와 군사비 지출증대의 압력을
넣기 시작한 해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GNP 대 군사비의 비율을 상향수정한 ACDA인데도 1982년도의 군사비 실액
은 남한 48억 달러, 북한 35억 달러로 평가하였다. 즉 남한이 북한보다 37퍼센트 더 군
사비를 쓰고 있다는 계산이다. 런던에 있는 저명한 군사연구기관인 국제전략연구소(IISS)
는 1982년도의 남한군사비 43억 달러, 북한군사비 17억 달러, 즉 남한군사비가 북한군
사비에 비해서 약 2.5배인 것으로 평가하였다.²⁴⁾

미국 군비관리 및 군축담당국(ACDA)은 이상하게도 1983년과 84년의 군사비 평가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정부의 다른 기관들과 IISS는 다 같이 1983년도의 남한군
사비를 44억 달러, 84년 43억 달러로 평가하였다. 같은 해의 북한군사비에 대해서 미국
정부기관들은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IISS는 83년 북한군사비 19억 달러, 84년 20억 달
러로 평가하였다. 다시 말해서 1983년에는 남한이 북한에 비해 2.3배, 84년은 2배 이상

22) 주 24의 자료.

23) Stephen D. Goose, 앞의 논문, p. 7.

24) IISS, *Military Balance*, 1984~85, p. 141.

의 군사비를 사용했다고 평가했다.²⁵⁾ 이것이 이른바 'GNP 대 군사비 비율' = '군사공격 위협'설의 이면이다. 우리 정부가 '북한군 우월'의 근거로 제시해온 GNP 대 군사비 비율 비교의 이면에는 이같은 진실이 숨겨져 있다.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보다 월등하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반대로 훨씬 열등하리라는 사실은, 군사력의 중심이며 기본인 무기와 장비의 구입비 비교에서도 역력하다. 남한은 북한에 비해 경제력이 약했던 1974년까지는 북한에 비해서 무기·장비 구입비가 적었으나 그후부터 큰 차이로 북한을 앞질러, 남한이 매년 10억여 달러의 무기를 구입하고 있는데 비해서 북한의 무기구입비는 1~3억 달러이다. 즉 남한의 무기구입비는 북한의 3배를 넘으며, 앞으로 그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1975년 이후의 무기와 장비의 구입비 추세를 표 5와 같다.

표 5 무기·장비 구입비 비교²⁶⁾ (1979년 가격 기준: 100만 달러)

연도	북	남	남/북 비율
1975	501	303	0.60배
76	610	697	1.14배
77	728	890	1.22배
78	732	1,152	1.57배
79	488	997	2.04배
80	654	1,009	1.54배
81	547	928	1.70배
82	338	1,062	3.14배
83	359	1,117	3.11배

5. 군사행동 사전탐지·공격억제 체제

미·소 초강대국은 현재 전지구와 우주를 대상으로 하는 치밀하고도 정교한 각종 첩보용 인공위성망체계 (spy satellite systems)를 거의 완벽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 첩보망의 성능으로 말미암아 가상적의 기습공격, 위장공격, 군사이동, 군사작전을 그 초기단계에서부터 탐지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탱크 한 대의 이동까지도 빠뜨리지 않고 포착된다. 항공물리탐, 로켓 분사력, 전자공학, 레이저광선…… 등 과학 발달의 종합적 결과이다. 그 성능의 신빙성을 극적으로 입증한 것이 최근의 미·소 중거리 미사일 철폐협정 합의이다. 그토록 여러 해를 끌어온 협상이 타결된 것은 현지검증에 합의가 이루어진 까닭도 크지만, 그에 앞서서 지금은 상대방이 아무리 은폐를 시도해도 첩보위성의 탐지능력을 속일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확인 능력이 제일 중요한 원인이다.

미·소양국은 전지구에 걸친 탐색망의 일부로써 각기 한반도의 휴전선 이북과 이남의 군사행동을 살살이 살피고 있다. 쌍방의 첩보위성은 예를 들어 비행장 활주로에 나와 있는 소형차량은 물론,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까지 식별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위성에는 그 탐지방식에 따라서 ① 육안관찰, ② 광학방식 (사진촬영), ③ 전파방식, ④ 레이저광선 방식, ⑤ 열감(熱感) 방식 등이 있다.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한 예를 들자면 광학(사진)방식은 5~6시간마다 선회하면서 같은 지역을 촬영하여 그 직전의 필름과 오버랩(중복)시키면 1피트(0.3m=33cm) 크기의 물체, 즉 농구공 정도의 정지물체는 물론, 이동물체의 이동상황이 자동적으로 검출된다.²⁷⁾ 지상물체, 해상선박, 공중비행물,

25 IISS, *Military Balance*, 1984~85, p. 102.

26 주 24의 자료 p. 47.

27 Curtis Peebles, *Battle for Space*, Handford Press, 1983, N.Y., pp. 23~46.

해서감수함, 인공위성, 로켓…… 등을 탐지 사찰 감시하는 특수목적의 위성체계가 완벽하다. 레이저광선 위성은 지하 터널이나 지하에 은폐된 무기·부대를 탐지하는 능력이 있다. 이동물체의 위치측정의 정밀도(또는 오차)는 15피트(4.6m) 정도로 완벽하다.

이와 같은 첩보위성체계가 미·소 양국에 의해서 휴전선 남·북영토를 정기적으로 사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밖의 정찰비행기, 지상 전파탐지기, 지하 지동탐지기……등 보조수단은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미·소 첩보위성국은 그 모든 종합적 방법으로 한반도의 남·북에서 준비중이거나 진행중인 동태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6·25전쟁처럼 북한의 탱크가 기습남침을 한다는 따위는 옛말에 속한다. 지상 및 지대공 대전차 장비 및 무기의 성능과 체제에 관해서는 앞에서 기술한 바 있다. 한마디로, 남침도 북침도 미·소가 원치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다.

6. 장기·종합 전쟁수행능력 비교

이상에서 간략하게 증점적으로 고찰한 것은 '현재'의 시간에서의 쌍방 군사력, 현재의 능력을 비교한 것이다. 보다 상세한 자료와 수치(예를 들면 각종 무기의 자세한 성능, 제원 등)를 낱말이 제시할 지면이 없어서 설명된 부분보다도 설명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는 사실은, 유감이지만 별 수가 없다. 그러나 그런 세부적 사실들은 대세를 좌우할 만한 것이 못된다.

이같이 처음부터 계획된 누락을 참작하더라도, 종합적으로는 남·북한의 군사력이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평가와 결론이 나온다. 이것은 역시 처음부터 검토대상에 넣지 않은 주한미군과 미국의 핵군사력을 제외하고도 그렇다. 그것을 남한의 '현재'의 군사력에 합친다면 군사력의 '질'적 차이 때문에 비교의 차원이 달라진다. 중요한 결론은 주한미군과 그 핵군사력을 제외하고서도 남·북한의 군사력은 '균형'(parity)상태라는 사실이다. 쌍방의 어느 쪽이 그 재래식 군사력의 어느 부분이라도 계속 증강한다면 이 '균형'은 깨어지게 마련이다. 이 불균형 상태는 거의 자동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타방의 대응적 군사력증강노력을 유발한다. 그 대응노력은 먼저 증강하는 쪽에서 상대방에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결정은 다시 말해서 균형상태를 깨려는 계산된 의도이며, 가깝스로 유지되고 있는 안정과 안전의 상태를 원치 않는다는 정책적 의도로 해석된다.

이상과 같은 결론은 지금까지 고찰한 현재의 군사적 균형상태를 전제로 하고서도 그렇다. 그런데 남·북은 각기 다른 체제와 국가 지도원리에 따라서, 의도하거나 또는 의도하지 않은 방향과 내용의 국력증대를 추진하게 마련이다. 그 과정에서 쌍방은 상이한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하게 된다. 이 과정을 일컬어 '종합적 전쟁수행능력' 또는 '장기적 군사경쟁 잠재력'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갖추고 있는 군사력이 발동될 경우에는 '현재' 상태로 그 국가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생산력, 경제체제와 구조, 과학과 기술, 정신·문화적 범주의 자원과 능력이 총동원된다. 이것이 '종합적 전쟁수행능력'이다. 전쟁이 아닌 상태에서 오랜 기간을 두고 군사력 경쟁을 지속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 남·북민족이 통일되거나 그에 준하는 정치적 평화공존체제를 이룩할 때까지는 장기적으로 군사력을 뒷받침하는 이른바 '국력'의 내용이 대립적 존재집단의 상대적 우월을 결정한다. 이것이 '장기적 군사경쟁 잠재력'이다.

이같은 장기적 종합적 관점에서는, '1988년 8월 현재'의 '단순·순수 군사력' 비교보다 훨씬 고차적이고도 가변적 요소들이 개입하는 장기적이고도 총체적인 연구가 필요해진다. 그와 같은 작업은 어떤 한 개인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기에 여기서는 욕심을 줄여서, 지난 한 시기의 추세를 불변함수로 삼아서 남·북의 장기적 종합적 군사력 평가를 시도해보려고 한다.

1) 인적 자원 및 동원력

장기·종합적 고찰의 제 1요소는 인적 자원이다. 남·북의 인구는 1985년 중간시점 기준으로 남 4,106만, 북 1,976만으로서, 2:1로 개산할 수 있다. 인구증가율은 남 1.25퍼센트, 북 2.23퍼센트인바, 이것은 북쪽이 남쪽과의 장기적 군사경쟁의 필요 때문이기도 하려니와 부족한 경제노동력의 요청 때문이기도 하다. 종합적 국력의 기초적 요소인 경제활동 인구는 북 852만, 총인구대 43.1퍼센트, 남 1,555만, 총인구대 37.9퍼센트이다.²⁸⁾

경제활동 인구는 바로 군사적 소요 인적 자원과 대체로 일치한다. 북쪽이 경제활동 인구비율에서 남쪽보다 높지만 그것은 여자의 경제·사회활동 참여가 증대한 결과이다. 그러나 전쟁상황에서의 병력동원 잠재력으로서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남한이 북한에 비해서 2:1로 우세한 산술적 계산에 변함이 없다.

2) 장기전을 뒷받침할 경제(생산)력(GNP)

장기적 총체적 군사행동의 토대가 되는 경제력에 있어서, 한국정부의 비교는 남 837억 달러, 북 151억 달러로 5.5:1로 본다. 그러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제도의 GNP 산출은 상당한 정도로 자본주의제도에 가산되는 사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외부의 여러 평가는 대체적으로 4:1로 본다(개인소득은 2:1). 이 총생산 면에서의 차이는, 남한이 1단위의 군사력 증강을 위해서 GNP의 1퍼센트를 더 투입할 때 북한은 4퍼센트의 투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 총경제력 차이는 두 가지 면에서 더욱 중요한 작용을 한다. 전쟁발생시에 단시간내에 민간부문 자원을 군사용으로 전환할 경우 남한이 즉각적인 군사력 우위를 누릴 수 있고, 둘째는 전쟁이 장기화된다고 가정할 때 그 지속능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성장율의 효과도 마찬가지다.

3) 경제구조적 동원력

GNP의 우월에 못지않게 경제구조의 차이가 큰 의미를 지닌다. 농업은 전쟁수행에 필요한 능력동원에서 공업보다 훨씬 그 효과가 적다. 농업의 GNP상 비율은 정확한 수치는 평가자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남 17퍼센트, 북 35퍼센트로 보면 무방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비농업·비군사적 생산력을 합친 상대적 전시동원능력은 남한이 북한보다 7.5배나 크다고 보는 평가도 있다.²⁹⁾

7. 민간부문 자원의 군용전환능력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전쟁발생시와 전쟁의 장기화시에 전쟁능력의 우월을 결정하는 요소는 전쟁발생시(즉 현재)의 순수군사력보다는 민간부문의 총체적 자원력이다. 곧 '민간부문의 군용전환능력'이다. 이에는 여러 가지 부문이 있으나 지면관계상 주요부문 몇 가지만 골라서 설명하기로 한다.

28) 국토통일원, 「남북한 경제현황비교」, 1985, p. 31.

29) *The Changing Balance, South and North Korean Capabilities for Long-Term Military Competition*, 1985, p. 36. 이것은 한국의 국방분석연구원(KIDA)과 미국의 유명한 군사관계연구 전문기관인 RAND Corporation의 합동연구조사서로서, 그 이름대로 남·북한간의 장기적 군사경쟁에서의 우월관계를 가장 종합적으로 검토 연구한 공식문서이다. 그 연구조사사업은 미국 국방장관의 지시로 진행되어, 공식문서로 제출된 것이다. 한·미 양국정부의 남·북한 관계에서의 종합적 장기적 정책·전략구상의 기초가 되고 있는 중요한 공식자료이다.

1) 화물자동차

군사작전이 확대되면 병력 및 군용물자 수송량은 급증한다. 그 소요는 '현재'의 군용자동차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 모든 나라가(우리나라도) 정상시에도 민간트럭의 비상동원체제를 운영하는 까닭이다.

남한은 북한에 대해 전시전용 가능 화물자동차의 세력에서도 대체로 3대 1에 가까운 우세이다. 정확히는 1986년말 현재 한국의 화물자동차 수는 54만 6,450대로서 북한의 약 22만 대에 비해서 2.7배로 우세하다.³⁰⁾

2) 항공수송 능력

비상시에는 민간항공기가 병력과 병참물자 수송용으로 전환한다. 그외에 상대방 영토에 더한 특공대 투입작전 수송을 담당하게 된다. 이 면에서는 특히 남한은 북한에 비해 월등 우세하다.

1988년 7월 현재, 남한은 대한항공(KAL)이 주축인 대형 제트여객기 44대, 수송기 8대, 합계 52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 숫자는 KAL 보유를 비롯한 관공서·민간의 각종 소형기 61대를 합치면 113대이다.³¹⁾ 같은 해의 북한의 민간항공기 현황은 자료가 없으나, 85년 현재의 비교는 남 108(각종 합계), 북 16이다.³²⁾ 북한은 남한에 대해 어떤 큰 규모의 특공대 투입침공도 감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확실하다.

3) 해상선박

해상수송력은 항공수송력보다도 더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 분야에서의 남·북한 전쟁능력은 특히 북한의 열세를 입증한다. 장기화된 전쟁을 준비하거나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 정부나 군부는 상대방과의 선박량을 먼저 계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분야에서 북한의 열세는 다른 모든 분야에서보다 현저하다. 남한이 국제 해운산업과 조선산업에서 세계의 최상위급인 것은 새삼 재언할 필요조차 없다. 북한경제는 무역입국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수송선의 보유나 건조에 치중하지 않았다. 남한이 30만 톤급의 선박을 건조하는 수준임에 비해서 북한은 최근 3만 톤급 건조에 이르렀다. 한국의 신조선 건조량은 1986년도 279만 6,220톤(그로스톤)으로서 세계 제 2위이며, 세계에서 20만 톤(배수톤)급 이상의 건조용 도크 시설을 두 개 소유한 곳은 한국밖에 없다.³³⁾ 선박보유량은 500만 톤으로서 북한에 비해서 10배이다.

4) 토목·건설기술

전쟁은 피아간에 막대한 각종 시설의 파괴를 수반한다. 특히 6·25전쟁에서 제공권을 장악한 미군의 대규모·지속적 폭격으로 전국토가 초토화되어버린 쓰린 경험을 가진 북한의 정치·군사·건설·공업지도자들일수록 이 점에 대한 인식은 남한의 상대자들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다. 실제로 북한의 최고지도자는 북한을 방문한 외국의 지도자들에게 이 경험의 쓰린 회고담을 하고 있다.³⁴⁾

30) 한국의 수치는 교통부, 「교통통계연보」, 1987, p. 335, 북한의 수치는 국토통일원, 「남북한경제현황비교」, 1987, p. 64의 1985년말 현재의 수치이다. 1985년 현재의 남한의 각종 자동차 총수는 111만 3천 대로서 북한의 22만 대의 5배이다. 그러나 북한은 그 수의 대부분이 화물자동차이므로 2.7배 정도가 타당한 대비라고 평가된다.

31) KAL기 통계는 대한항공공사 조사개발과에 문의한 결과이고 전국통계는 교통부, 「교통통계연감」, 1987, p. 335.

32) 앞의 국토통일원, 「남북한 경제현황비교」, p. 65.

33) 「조선자료집」, 한국조선공업협회, 1986, pp. 44, 82.

34) 이 회고담은 1985년 일본의 잡지 「세계」에서 읽었으나 그 기사를 보존하지 못한 까닭에 자세한 자료는 제시할 수 없다.

북한은 국내건설사업에서는 대체로 남한과 비등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남한은 1970~80년대에 전세계적으로 토목건설 공사의 국제화청을 맡아 그 분야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룩하였다. 특히 중동지역에서는 일시에 6만 명의 기술자·기능공·노동자가 각종 건설공사에 종사한 기술적 경험을 가지며, 그 연인원은 수십만을 넘는다. 이것은 세계적인 규모의 건설공사에서 사용한 우수한 각종 장비와 그 조작·정비 능력의 훈련과 함께, 북한으로서는 추종하기 어려운 강점이다.

그밖에도 고려돼야 할 사항과 요소는 수없이 많다. 그러나 전쟁을 준비하거나 감행하려는 정치지도자·군사전략가라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은 대개 검토한 셈이므로 생략한다.

8. 국제적 조건과 환경의 구조

북한은 단기적 장기적 군사력과 국가적 전쟁자원, 그리고 민간부문의 군사용 전환효과……등에 있어서 남한보다 훨씬 열세한 사실이 입증되었다. 이 사실은 바로 물질(물리)적 전쟁수단에 있어서는 북한이 어떤 방법으로도 이른바 '남침전쟁'을 감행할 수 없다는 판단을 가능케 한다.

이 부인할 수 없이 분명한 열세를 어느 정도 보완하는 유일한 조건은 국제적 환경이 압도적으로 유리할 경우이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소련·비동맹국가군과의 관계는 북한의 군사적 행동은 반대하는 방향에서 확고하다. 1961년에 체결된 중·조, 소·조 우호협력(방위)조약도 한·미방위조약과 마찬가지로 군사적 방식에 의한 한반도문제의 해결은 반대하고 있다. 북한의 남침행위에 대해서는 중국도 소련도 지원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이다.

북한과 소련 및 중국과의 관계는 줄곧 격심한 기복·고저·근원의 곡선을 그리면서 서로 '불가원·불가친'의 관계로 지속되었다. 현재와 장래의 관계도 중·소의 국가이기주의적 정책, 특히 소련의 고르바초프정책은 오히려 한반도에서의 현상유지를 원하는 구상인 것이 분명하다. 소련이 북한에 미그 23 등 다소의 신예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바로 현상유지를 위해 미국이 남한에 제공 또는 판매한, 월등 우세한 현대무기와의 격심한 열세를 어느 정도 보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 댓가로 소련이 북한의 항만이용권이나 영공통과권을 획득한 사실도 북한의 군사력강화를 지원하기보다는 북한의 군사적 경제적 열세로 말미암은 남한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감을 무마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남·북한 각기와, 한반도를 둘러싼 연관 강대국들로 형성되는 국제적 환경에 관해서는 그들이 전쟁발생을 적극 저지하려는 기본노선이 너무나 상식화된 상태이기에 상세한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9. 전쟁목표와 전쟁피해의 가치비교 및 전쟁의지(잠정적 결론)

압도적으로 우세한 남한의 군사력·전쟁수행잠재력을 상대로 한 전쟁은, 전쟁목표가 설혹 '민족통일'이라는 고귀한 가치라고 하더라도,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계산할 때 그 가치의 평가는 전쟁의 부정으로 귀결된다. 이 가치평가에서 전쟁을 택하게 할 긍정적 적극적 요소는 한 가지도 없어보인다.

위에서 충분히 검토한 논리적 결과는, 아무리 '의지'가 있더라도 북한(지도자나 국민대중)이 전쟁을 감행하려거나,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종합적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6·25의 잿더미에서 헛되고 굶주림을 참으면서 현재 같은 복구와 건설을 실현한 북한의 지도자·전략가·인민대중이 군사적 열세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다시 그 피와 땀의

성과를 잿더미로 만들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는 많은 증거가 있다. 따라서 위협을 느끼는 쪽은 오히려 북한일 것이라는 평가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할 것이다.

쌍방이 군사력 증강을 서두르기보다는 현재의 선에서 증강노력을 정지 동결하는 데 합의한다면 그 결과는 쌍방에 유리할 것이다. 더욱 소망스러운 것은 쌍방이 현재수준에서 군사력을 단계적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 감축해가는 데 합의할 수 있다면 그로 말미암은 이익은 더욱 클 것이다. 군사력 증강노력은 상대방에 대한 대응적 증강 때문에 결국은 끝간 데를 모르는 무한정의 나선적 악순환을 초래한다. 이 나선형 운동은, 어느 단계에서 그 진행을 따르지 못하겠다고 생각하게 된 타방으로 하여금 생사를 건 선제공격의 유인이 된다. 아니면, 어느 단계에서 자신의 우월성을 확신하게 된 일방이 약세라고 판정되는 타방에 대한 '건곤일척'의 선제공격의 유혹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 어느 쪽의 경우건 그 결과는 남·북 동포간의 동족상잔이고 6·25의 되풀이가 된다. 이 땅에 외국군대가 있는 조건에서는 그같은 충돌은 전쟁논리의 필연적 귀결로서 그 외국군대의 선행개입을 의미할 것이다. 그 외국군대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조건에서는 이 땅에서의 핵전쟁을 의미한다. '현재'의 군사력을 균형적으로 감축하는 길만이 그 악순환과 무모한 자원 낭비를 예방하는 것임은 너무도 분명하다. 남·북 동소사회의 대중과 그 정부, 그리고 특히 직업적으로 제 1차적으로 관계되는 군부가 냉철한 이성과 분별력을 회복 견지해야 할 절대적 책임이 여기에 있다.

북한의 통일노선이 1960년대의 '필요하다면' 무력통일에서 70년대의 공존정책으로, 그리고 현재의 타협정책으로 수정 전환된 배경이다. 이제 '무력통일'이라는 방식은 남·북 분단민족의 여러 가지 통일방법에서 탈락했음이 분명하다. 오히려 종합적 군사력에서 북한보다 월등 우세한 남한의 태도가 불확정적 요소로 남아 있다고 함이 옳을 것이다. 그 초보적 의사표시가 노태우 대통령의 7월 7일 6개항목 공존정책으로의 전환이라면, 앞으로 남·북에 요청되는 과제는 무엇보다도 무의미하고 낭비적인 군사대결정책에 중시부분을 빼고 군사력의 감축을 서두르는 일일 것이다. ❖

6. 한반도 군축을 둘러싼 주변국의 전략과 입장

전 원 하

(사회와 사상, 한길사, 1990.4)

1. 군축에 대한 미국과 소련의 입장을 중심으로

지난해 12월 미·소 정상회담에서 '냉전종식'에 관한 역사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이래, 그 세계사적 조류가 한반도에는 어떻게 투영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연초부터 주한미군의 일부감축에 관해 잇따라 발표하면서 4월경으로 예정된 남북한 정치군사회담에서 군축 내지 군비통제에 대한 협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최근의 군축논의가 발생하게 된 전원이자 국제적 동향에 있다고 볼 때 이 문제를 보는 한반도 주변 관계국들의 입장을 살펴보는 것은 한반도 군축 협상의 장래를 전망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일 것이다. 즉 소련에서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새로운 사고'를 표방하면서 적극적인 군축·평화공세를 전개하고 미국이 이에 호응하는 형태로 전세계적인 군축분위기가 조성되는 속에 한반도 군축의 문제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진행된 일련의 미·소 정상회담에서 지역문제 가운데 한반도문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의 하나로 논의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2차대전 이래의 전세계적 냉전질서를 유럽과 아시아로 나눌 때 한반도가 아시아 냉전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임과 함께 현재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지역 가운데 한반도가 미·소 두 세력권이 대립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지역이라는 사정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한반도 군축에 관한 관계국의 입장을 살펴보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국과 소련의 입장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다. 일본은 거의 미국의 입장을 추수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독립변수로서 파악할 수 없으며 중국은 한반도문제에 대한 영향력이 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미국과 소련의 입장을 중심으로 보면서 중국의 경우에는 그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해명하겠다.

2. 한반도 군축논의의 국제적 배경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앞서 최근 한반도 군축에 관한 논의가 급격히 일어나게 된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해 볼 때 국제적 배경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각국의 입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차대전 이후의 전후질서는 미국과 소련을 양극으로 한 세계의 분할과 분할된 세계의 냉전적 대결구조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었다. 아시아태평양지역도 그 예외는 아니다. 미국은 일본·한국·필리핀 등과 안보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자신들의 군사력을 이 지역에 전진배치시킴으로써 소련에 대한 군사적 봉쇄망을 형

성하였으며, 소련도 지속적으로 극동지역의 군사력을 증강하고 베트남·중국·북한 등과의 안보협력관계에 노력함으로써 미국의 봉쇄정책에 대항해나갔다. 그런데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정치·경제·군사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역관계상의 명백한 불균형이 존재한다. 그것은 대체로 소련에게는 불리하게, 미국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였는바, 미국이 이 지역 각국과 긴밀한 안보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데 반해, 소련은 중소분쟁, 북한의 독자외교 등으로 인해 동맹적 협력자를 찾지 못한 데서 그 불균형은 분명하게 파악될 수 있는 사실이다.

블라디보스톡 연설과 크라스노야르스크 선언으로 대표되는 고르바초프의 아시아외교는 이같은 역관계상의 불균형을 브레즈네프 시절과 같은 군사력 증강이 아니라 정치·경제적 접근에 의해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다. 고르바초프는 이 지역의 안정과 군축, 긴장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헬싱키회의를 모범으로 하여 태평양에 관세하는 모든 국가가 참가하는 태평양회의'(블라디보스톡 연설에서)의 개최를 제안하였다. 이는 군비증강이 아닌 군축을 통해 미국의 봉쇄망을 돌파하겠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강고한 안보동맹관계에 의해 이루어진 역관계상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고르바초프의 외교공세는 당초 미국에 의해 '미소와 악수에 의한 외교적 침략'이라는 비난으로 일축되었다. 미국은 안보동맹관계의 존속에 의해 이 지역에서 막대한 정치·경제·안보적 혜택을 누려왔는데, 소련이 그 혜택을 위한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취하는 데 반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미·일관계의 경우를 보더라도 미국은 일본에 대해 이른바 '안보공약'을 계속 제공하는 대가로 20여 년 동안 계속 격화되어온 양국간 경제분쟁에서 일본측의 거의 일방적인 양보를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전세계적인 데탕트의 추세가 그러했듯이 미국은 소련의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마냥 거부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자체내의 한계가 존재한다. 레이건이 추진했던 미증유의 군비증강은 세계적인 평화여론에 밀려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였다. 유럽에서 단거리 핵미사일의 삭감교섭을 거부해온 레이건, 부시 양정권의 정책은 나토의 와해위기로까지 발전하기도 하였다. 또 군비증강에 투입된 엄청난 재정자금은 쌍둥이적자(무역적자와 재정적자)라는 미국경제의 과멸적인 부(負)의 유산을 떠넘김으로써, 미국은 이제 '군사적 안보'가 아닌 '경제적 안보'를 위해 군축협상을 재평가하게 된 것이다.

일련의 미소 수뇌회담에서 한반도문제가 계속 현안으로 등장한 사실에 비추어 미·소 모두 아시아지역에서의 양국관계를 재조정하는 데 한반도문제의 해결이 필수불가결함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소 양국은 87년 말부터 한반도문제에 대한 외무차관급 협의를 계속해왔으며 그 일환으로 전문가 수준의 협상태이블도 계속 마련되어왔다. 88년 6월 소련의 알마아타에서 열린 '한반도안정'에 관한 미·소 공동심포지움(소련 극동연구소와 미국 스탠포드대학 국제전략연구소 공동개최)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3. 한반도 군축에 관한 미국의 입장

한반도 군축의 문제는 주한미군의 철수문제와 긴밀히 결합되어 있다. 미 2사단이 수도권 방위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 주한 미공군이 공세작

전에서 주력을 이루고 있다는 점, 나아가 한미연합사에서 미군측이 작전통제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한반도 군축은 단순히 남북한간의 군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철수문제와 연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53년 체결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 내지 강화조약으로 대체하는데 외국군의 철수문제가 가장 주요한 사안임은 물론이다. 따라서 미국이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고집하는 한 한반도 군축의 실질적 수행은 불가능하며 그동안 군축문제에 대한 언급 자체를 회피해온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이같은 사정에 입각해볼 때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부분감축이 전면철수를 위한 단계적 조치의 일환이라고 한다면 미국의 정책에 명백한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도 지난 3월 5일의 외교부 성명을 통해 "미국이 실제로 주한미군의 완전철수의 시작을 의미하는 부분철수를 위한 그 어떤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이와 관련한 남북한간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기대를 표명한 바 있다. 여기서 특히 '부분감축을 위한 그 어떤 실질적인 조치'라고 표현되고 있는 데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미국이 주한미군의 일부감축을 추진하는 의도는 어디에 있는가? 우선 지난 1월말 체니 국방장관이 발표한 3개 공군기지의 폐쇄와 공군 지원 요원 2,000명의 감축이나 2월 15일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미국측이 제시한 93년까지 5,000명을 추가감축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미국은 단순한 군사력 재조정(이른바 미군의 '군살빼기'를 통한 비용절감)이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은 주한 미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RE4C 정찰기를 한국측에 매각하고 대신 F16을 추가배치한다고 발표, 오히려 주한미군의 전력은 제고될 전망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보면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미군을 한국방위에 '지원적 역할'로 조정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이 주목된다. 이는 장래 주한미군을 대폭 감축하겠다는 의사의 간접적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그러면 적어도 미국은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주한미군의 실질적이고 대폭적인 감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서 문제의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1월 29일 체니 국방장관이 3개 공군기지의 폐쇄를 발표한 내용에 주의를 돌릴 필요가 있다. 정확히 표현하면 주한미군의 3개 공군기지를 한미 공동기지(COB)로 바꾼다는 것인데,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못하다. 미공군의 기지에서 공동군사기지로 전환한다는 것은 87년의 연례안보협의회에서 그 체결을 위한 양해각서가 교환된 바 있는 전시주둔국지원협정의 구체화 작업이다.

80년대에 들어 미국은 일본 및 나토 가맹제국과 전시주둔국지원협정을 체결해왔으며 그중 주둔국 지원의 대표적인 형식이 공동군사기지이다. 전시주둔지원협정은 유사시 한반도에 증원 투입되는 미군의 작전행동을 위해 주둔국(한국)이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한다는 것이 그 요체이다. 여기서 공동군사기지는 평시에 한국측이 그 기지의 시설·운동을 담당하고 유사시에는 미군이 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일견 전반적인 방위분담 확대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실제로도 이 방법이 그 주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주둔

미군에 대한 비용지원의 확대와 증원 투입될 군사력에 대한 지원은 성격상 질적으로 다르다. 즉 종래 한미간의 상호방위조약이 미군의 한국 주둔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전시주둔국지원협정은 그 전제를 반드시 안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물론 여기서 상호방위조약이 전시주둔국지원협정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은 매우 성급한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캐토연구소의 독 밴도 연구원은 『포린 폴리시』지 89년 겨울호에서 「한국과의 작별」이라는 글을 통해 상호방위조약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이 미국내 정책담당자들의 일반적인 의견은 아니다. 이번 발표에서도 공동군사기지화의 대상은 3개의 보조기지였으며 오산·군사의 2개 주기지의 전력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그러면 미국이 주한미군의 감축을 현재와 같이 단순히 '군사적 편성의 재조정'이라는 관점으로부터 한국방위에 '지원적 역할'로까지 조정하는 방향으로 연결되는 데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 것인가?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최근에 들어서만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경우는 카터의 철군정책 이래 최초의 일이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실질적인 감축에 관한 그 어떠한 언급도 완전철수 주장의 확산으로 연결될 것을 우려해 회피해왔는데, 이번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이에 관한 중요한 언급이 나온 것이다.

그 언급은 아직까지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내 전투병력의 감축 등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일상적인 관용어에 묻혀 극히 애매한 형태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체니 국방장관이 "주한미군의 변화는 북한의 긴장완화조치와 연계되어 있다"고 밝힌 것은 종래의 미국의 입장에 비추어볼 때 대단히 획기적인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문제가 결코 북한과의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변화는 결코 이번 회담에서 갑자기 제시된 것은 아니다. 그 연원은 이미 88년 10월에 취해진 북한에 대한 제재의 완화조치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 이후 북경에서 7차에 걸쳐 진행된 미·북한간의 외교관 접촉은 양국간에 모종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알려진 것이 거의 없으나 미국 고위관리의 몇 가지 발언을 통해 그 대강을 짐작할 수는 있다.

그 하나가 리처드 솔로몬 미 국무차관보(동아시아태평양 담당)가 지난해 6월 미의회에서 행한 증언이다. 그는 증언을 통해 주한미군의 장래문제와 관련시켜 언급하면서 북한에게 군사적인 합리적 충분정책의 채택, 비무장지대 인근에 집중배치된 군대의 철수, 단기간내에 공격할 준비를 갖춘 모든 공격부대와 교량건설 및 기타 부대의 제거, 핵안전협정에의 가입, 테러행위의 종식 등 5개항의 신뢰양성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였다. 북경의 외교접촉에서도 미국측의 일관된 요구는 이 신뢰양성조치에 맞춰져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나온 조치의 내용으로는 솔로몬의 주장 이외에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의 송환, 팀스피리트에 참관단 파견 등이 있다. 이를 현상적으로 보면 미국이 유럽 군축과정에서 이루어진 스톡홀름 합의를 모델로 하여 한반도 군축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즉 군축의 전단계로서 광범위한 신뢰양성조치를 취함으로써 군축의 실질적 수행을 위한 전제조건 내지 분위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과약의 결정적인 맹점은 미국의 요구가 신뢰양성조치의 기본 원칙이라 할 수 있는 상호주의적 접근을 거의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단

적인 예가 핵병기의 문제이다. 유럽의 경우에는 동서 양블럭이 상호간에 거의 대등한 핵병기를 보유하고 대체적인 균형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철거문제가 굳이 신뢰양성조치의 대상으로 될 필요는 없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는 미군만이 핵병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내역을 보면 그것이 대북용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그 철거협상을 전제로 한 핵병기 존재의 확인 및 검증은 중요한 신뢰양성조치로 설정된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남한에 배치된 핵병기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않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을 뿐이다.

북한의 전진배치 전력 철수의 경우에는 문제가 대단히 복잡하다. 이는 극히 북한식의 공세적 방어전략의 일환이며 한미연합군도 공지전 독트린이라는 공세적 방어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북한군의 전진배치가 후방공격을 중시하는 공지전 독트린의 채택 이후에 이루어진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결국 남북한 모두 '공세적 방어전략'의 기본틀 자체를 한반도 군축을 위한 협상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4. 한반도 군축을 보는 소련의 입장

블라디보스톡 연설이나 크라스노야르스크 선언을 비롯 소련의 공식적인 성명 또는 논평을 보면 한반도 군축을 보는 소련의 입장이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통일의 선결조건으로 주장하는 내용, 즉 주한미군 철수, 비핵지대화, 남북한 상호감군 등에 대한 지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소련이 이같은 공식입장을 표명한다고 하여 소련의 정책을 이 문맥 그 자체로 고정시켜 파악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소련은 아시아에서의 전반적인 미소 대결구도 속에서 그것을 해소 내지 완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한반도 군축문제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련이 북한의 주장 가운데 특히 통일의 선결조건으로 주장하는 점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군축에 관한 소련의 입장을 보다 실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련이 아시아 군축의 모델로 상정하고 있는 '태평양관 헬싱키회의'의 성격과 내용을 살펴보고 그것이 한반도 군축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선은 헬싱키회의의 그 자체의 성격규명이 필요한데, 그것은 한마디로 2차대전 이래 유럽에서 형성된 전후질서의 국제적 승인을 위한 것이었다. 즉 독일을 둘러싼 전후의 평화조약 체결, 독일·폴란드간의 국경승인, 나아가 동구 사회주의제국의 서방측에 의한 승인 등이 헬싱키회의에 참가하는 소련의 일관된 목적이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소련의 관심은 단지 전후의 현상승인뿐만 아니라 안전보장상의 협약의 영속적 준수와 그 검증에도 있었고 그를 위해 상설기관의 설립, 안전보장을 위한 국제협력의 제도화를 지향하고 있었다.

그런데 고르바초프의 '새로운 사고'에서는 위의 목적에 새로운 내용 내지 정신이 추가된다. 그것은 헬싱키회의의 및 그 연장으로서의 헬싱키 프로세스를 통해 단순한 나토-바르샤바간의 협상태이블이 아닌 다국간 교섭의 장으로서 거듭 헬싱키체제의 성과를 재평가한 것으로, 그 내용은 소위 '유럽 공통의 집' 구상으로 발전하게 된다. 즉 안보협력과 경제협력에 독립된 주권국의 '자유로운 선택'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고르바초프가 단지 냉전체제의 해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서 양진영으로의 세계분할을 의미하는 알타체제의

해체까지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태평양관 헬싱키회의' 구상에서도 이같은 고르바초프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블라디보스톡 연설에서는 "미국의 참가 없이는 모든 문제에 만족할 만한 형태로 태평양지역의 안전과 협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됨으로써 아직까지 냉전체제의 해체에 그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보인다. 그러나 크라스노야르스크 선언에 이르면 고르바초프는 '선택의 자유'를 '평화공존'의 원칙과 함께 아시아정책의 입각점으로 삼고 있음을 강조한다. 결국 고르바초프가 말하는 '태평양관 헬싱키회의'는 각국의 동등권에 기초하고 안보 및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한 국제공동체의 협의기구로 파악될 수 있다.

그런데 블라디보스톡 연설과 크라스노야르스크 선언에서 '태평양관 헬싱키회의' 제안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그 구상이 전면화되고 있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단순한 수사적 표현일 뿐이었을까? 물론 그렇지 않다. 이후 고르바초프의 관심은 그 실현을 장기목표로 한 사건 정지작업에 있었던 것이다.

'태평양관 헬싱키회의'의 즉각적인 실현에는 많은 난관이 가로놓여 있다. 그 하나가 미국의 거부적 태도이며 다른 하나는 아시아 각국과 소련의 관계가 제대로 정상화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결국 미국이 이 구상을 반대하는 속에서 소련이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방도는 이 지역 각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고르바초프는 실제로 그렇게 움직여 중소관계의 역사적 전환을 이루어냈으며 일본·필리핀 등과의 관계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올해 2월에는 리쥬코프 총리가 아세안 각국을 순방하며 그 영역을 동남아로 확대시켰다.

소련이 87년말부터 미국과 한반도문제에 대한 일련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그 구상의 사전정지작업의 일환으로 파악된다. 소련은 고르바초프구상의 주된 장애물 가운데 하나로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한반도라는 세 개의 '지역문제'를 설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고려 속에서 한반도의 긴장완화 내지 군축실현을 위한 외교공세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의 한반도문제 협의에서 소련이 취하는 일관된 입장은 한반도 통일을 위한 남북한 당사자간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관계국이 공동협력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알마타 공동성포지움에서 채택된 공동논문 「한반도의 안정강화와 협력관계 증진」에서도 그러한 입장이 명백히 표명되고 있다. 즉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에서의 정치적 내립을 종식시키고 군사대결 정도를 완화시키며 군사·휴전상태를 좀더 안정적인 평화로 전환시켜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제거하기 위한 공동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은 한반도 군축에 대한 관계국의 협력을 촉구하는 것일 뿐 그것이 군축정책의 내용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 소련은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는 이상의 어떠한 한반도 군축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태평양관 헬싱키회의' 성사의 일환으로서 한반도 군축을 파악한다고 하여 헬싱키 프로세스에서 채택되었던 군축방안을 한반도에도 적용시키리라는 근거는 아직 희박하다.

그러나 주한미군 감축문제와 남북한 군축문제에 대한 소련의 접근법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회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는 있을 것이다. 우선 크라스노야르스크 선언을 보면 소련이 주한미군 철수문제와 관련해 특히 주한

미군이 보유한 핵병기와 해군력 및 공군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여기서 해군력은 미 7함대 전력의 한국 연안에서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분명히 소련이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균형과 관련해 미지상군문제는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주한 미지상군문제가 한반도 자체의 내적인 시각에서 갖는 의미에 비추어볼 때 중요한 문제이다. 즉 지상군문제는 미·북한간 협상에 가장 중요한 현안이며 지상군의 주둔 자체가 미국의 대한 안보공약을 용변하고 있는 것이다. 소련이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정책으로서 미지상군문제를 경시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는 없지만 소련의 정책적 노력이 이 문제와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일부에서 소련이 주한미군의 전면철수보다도 '상징적 수준으로까지의 감축'을 의도하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 지상군 문제와의 관련에서 새롭게 조명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남북한 군축문제와 관련지워보면 소련이 86년의 스톡홀름 합의 모델에 입각해 신뢰양성조치가 선행하는 군축실현을 지향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것은 알마아타 심포지움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소련측의 의도가 북한에게 전달되면서 북한이 최근 신뢰양성조치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추측도 가능하다. 실제로 북한은 최근 들어 한국전에 참전한 미군 유해의 송환이나 핵안전협정의 가입, 비무장지대의 평화화 등 신뢰양성조치에 대한 협상의사를 계속 표명해오고 있다.

5. 한반도 군축을 보는 중국의 입장

소련이 공식적인 입장에서 북한이 통일을 위한 선결조건으로서 요구하고 있는 군사적 문제를 특별히 강조하여 지지하는 반면 중국은 북한의 통일정책 전체를 포괄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공식입장이다. 이같은 중국의 입장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형성된 것인데, 그 하나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지원'의 필요성이며 다른 하나는 중국이 동북아의 군사적 세력균형에서 '현상유지'를 바란다는 것이다.

중국은 만주지역의 산업 및 광업자원을 보호하는 데서 한반도의 정세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으며 소련과의 경합과 관련해서도 한반도를 중시하지 않을 수가 없다. 결국 중국은 소련과 같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군사적 지원을 할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이 지나치게 소련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외교적 지원' 위주의 정책으로 북한과의 '선린관계'를 유지하려 하며 이것이 북한의 통일정책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지지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주한미군의 '즉각적' 철수를 지지하거나 '단계적' 철수라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이것은 주한미군의 성격이 남북한관계에서 갖는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소련·미국이라는 3각관계의 위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또 주한미군의 철수는 필연적으로 일본 방위력의 증강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중국은 주한미군과 그 핵병기가 소련에 대한 견제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억제하고 있는 존재로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이같은 양면적 입장때문에 한반도 군축문제와 관련해 그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지난 84~85년 사이에 중국은 북한이 3차

회담안을 제기한 것을 받아 미·북한간 접상의 중재역을 자임한 경우가 있다. 당시 중국은 '대만문제'로 소원해진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미국의 입장을 이용해 미·북한간 협상을 이끌어내고 그것이 84~85년간의 일시적인 남북대화를 가능케 하였다. 또 이를 계기로 미국이 한·중간의 접근을 유도해 이후 한국정부가 북방정책을 추진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사실은 주지하는 대로이다.

이 협상과정에서 중국의 중재적 영향력에 명백한 한계가 노정되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일시적 해빙기는 틱스피리트 훈련의 강행과 그에 대한 북한의 반발로 단명으로 끝나게 되는데, 그것은 중국이 한반도 군사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후 중국은 북한에 대한 외교적 지지와 남한과의 경제협력 확대라는 양면정책으로 한반도정책을 전환하면서 한반도 군축과 관련해 중국이 더이상 변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최근의 상황을 현상적으로만 보면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의 입장으로 기울고 있다는 관측이 가능하다. 즉 중국은 천안문사태에서의 강경정책 이후 북한과의 관계를 보다 긴밀히 하고 있으며 남한과의 관계에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듯한 인상이다.

중국이 한반도에 대한 그동안의 정책기조를 크게 변화시켰다는 징후는 없다. 중국이 4대 현대화노선을 기축으로 한 개혁·개방정책을 지속하는 한, 그리고 82년 이래의 독립자주외교노선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책기조는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설명 중국의 정책에 일정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도 천안문사태 이후 중국의 대외적 영향력이 크게 축소(국제적 고립)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한반도 군축을 둘러싼 정세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중국이 주한미군 철수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인 정책을 취하지 않는 것에 반해 남북한 군축에 대한 그 입장은 보다 활발하게 개선되고 있다. 즉 중국은 '남북한 당사자간의 대화에 의한 군축실현'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원칙적인 입장표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위에서 밝힌 중국의 정책기조를 보면 명백해진다. 실제로 중국이 남북한 군축협상의 진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징후는 없으며 남북한 군축의 방도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중국측으로부터 제시된 내용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6. 맺음말

올해 들어서 진행된 일련의 상황을 보면 대체적인 전망의 윤곽은 잡힐 수 있는바 간단히 그에 관해 언급한 뒤 글을 마치려 한다. 우선 올해 1~2월 사이에 진전된 상황을 보면 특징적인 것이 미·북한관계에 미국의 전향적 입장표명과 한·소관계의 진전이 서로 맞물리고 있다는 점이다. 베이커 미국무장관은 지난 2월 세바르드나제 소련외상과의 회담을 앞두고 미의회에서 행한 증언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그 직후 에네트리 주한미군 사령관은 '주한미군 감축문제가 남·북한간의 군축문제와 연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동시에 한·소간에는 영사처관계가 형성되고 직항로 개설이 합의되는 등 실질적인 관계정상화를 위한 중요

한 조건들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같은 과정이 결국 미소간의 한반도문제 협의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파리에서 외무차관급의 협의를 속개하겠다는 발표가 이를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소련의 움직임이 북한의 통제하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북한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렇다면 앞서도 소개한 바 있지만 3월 5일에 이루어진 북한 외교부 성명의 문맥이 다시 환기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은 원래 주한미군의 완전철수를 미·북한 관계개선 및 남북한 군축의 선행조건으로 삼고 있었다. 그것이 3자회담 제안을 통해 선행조건이 아니라 과정적 내지 사후적 조치로 변경되었는데 이번 성명에서는 그것이 "완전철수의 시작을 의미하는 부분철수를 위한 그 어떤 실천적인 조치"로 바뀐 것이다.

결국 이상의 내용은 미·북한간의 협상에서도 모종의 타협점이 모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것이 물론 현재는 틴스피리트 훈련 기간이라는 한계 때문에 현실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이 끝나는 4월 이후에는 구체적인 진전이 기대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국제관계상의 변화를 통해 추적해본 전망이며 그것이 현실화되는 데는 남북한 모두 복잡한 국내적 조건의 상태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